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1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조선주 · 김효주 · 김효선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선 주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효 주 (본원 연구위원)

김 효 선 (본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양성평등은 이제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양성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국가재정을 선진화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개발에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최초의 법정서류로서 작성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등 제도적 장치에 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서가 네 번째 작성되면서 질적인 내실화를 위해 평가 시스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다시 살려 그 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 수행된 파일럿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안 및 평가기준안을 개발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는 기관의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별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각 기관에 환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원내외 자문위원과 평가단, 방대한 자료구축과 분석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께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이 연구결과가 성인지예산제도와 국민이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성인지예산제도는 법·제도적인 기반 확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도입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한 상태임
-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시행의 도구와 절차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기 해당 부분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단발적으로 대상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안) 및 평가기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또한 개발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적용하고, 평가기준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 해당 평가의 목적은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대상으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별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내용을 각 기관에 환류하는 데 있음
- ☐ 본 연구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본 시범연구(pilot study)이며, 동시에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해당 기준 및 모형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합리적인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

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 기준을 검토·분석함(Ⅱ장). 둘째,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 개발함.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작성된 대상사업들을 적용하여 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을 진단함(Ⅲ장). 셋째,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를 위한 평가 모형 및 평가기준(안)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확정된 평가모형(안)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적용, 평가결과를 기관평가결과와 사업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함(Ⅳ장).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함(Ⅴ장)

-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까지 국회에 법정서류로 제출된 성인지 예·결산서(『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의 분석 및 관련 문헌연구를 실시함. 둘째,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1차로 개발된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모형을 수정·확정함. 이러한 상호검증 과정을 통하여 평가모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셋째, 확정된 평가모형(안)을 토대로 평가단을 구성¹⁾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함

3. 주요 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국내 주요 평가제도의 대상사업 평가기준과 평가기준 규정을 재정사업자
울평가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
펴봄

1) 평가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연구진 및 평가 전공인 행정학과 교수, 여성정책전문가,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진행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를 주체로 실시되는 재정사업 부문의 자체평가 제도로 2005년 이후 시행되고 있음.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며, 2011년 현재 39개 기관, 474개 재정사업(일반재정 405개, 정보화 69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대상사업은 3년을 주기로 변경되며, 인건비·기본경비·기금운영비 등을 제외한 모든 재정사업이 그 대상임. 평가는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5단계로 등급화되어 제시됨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임.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임. 대상사업 선정방식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과제 선정방식과 지정과제 선정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2011년 지정과제 분야는 ‘일자리와 안전 관련 사업’이었음. 또한 각 기관에서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함. 평가항목은 과제선정, 평가보고서, 운영활성도, 정책반영이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함
-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고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평가하는 요청평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는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요청평가는 정책의 사전·중간·사후평가가 가능한데 반해, 선정평가는 정책의 중간·사후평가만 가능. 우선 평가대상 정책 세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시사점
 - 첫째, 선정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할 경우 각 기관마다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됨. 따라서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예: 우선작성 대상사업 제시 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강제성이 요구됨.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모든 재정사업이 3년을 주기로 작성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과제의 범위와 수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음.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지닐 경우 제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셋째, 과제선정방식에 있어서 자율선정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의 추진방식 안에서 다양한 과제선정방식(자율과제, 요청과제, 선정과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에 관한 시사점

- 첫째,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이 분리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평가절차에 있어, 평가내용 및 지표가 사전에 공지되고 평가 이후 환류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환류과정에서는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개발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련된 연구 및 각계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적용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분됨.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작성사업의 경우 검토과정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기 작성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의 실익을 결정하는 요인을 사업내적요인과 사업외적요인으로 구분함

- 사업내적요인은 사업분야, 사업수단,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과 같이 사업 자체와 관련된 요인들로 성평등과는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임
- 사업외적요인은 성별구분통계의 구축여부, 담당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및 제도 이해도, 기관장의 의지, 성별영향분석 실시여부와 같이 사업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나 작성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

□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 사업내적요인과 사업외적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들 중 대상사업 선정 이전에 검토·분석이 가능한 요인들(사업분야, 사업수단)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및 사업수단에 따라 정부의 사업을 분류(276개)함(1단계)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 방향(2단계),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중점분야 사업들을 선정(3단계)함
-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성별영향분석 및 전문가의 심층분석이 필수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상기 기준(안)에 따라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 적용함

- 전체 276개 기준에서 현재 작성 중인 대상사업이 포함된 기준은 83개임
- 사업의 분야 및 수단이 편중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내역사업 기준 전체 304개 사업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속한 사업이 115개(37.8%)로 가장 많음.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에서 3개 사업수단-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원(24개/115개 사업), 교육훈련(19개/115개사업), 인력양성운용(14개/115개 사업)-에 사업이 편중됨. 따라서 성인지예산서 미작성 분야 및 수단을 확인하여 새로운 대상사업을 발굴·사업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음.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전문가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작성 실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5.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과 평가결과

-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은 21세기 공공부문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현재 작성양식에 성과목표(지표) 항목을 포함하여 성과관리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성과목표만으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별도의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이 개발되어야 함

-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를 통해 해당 기관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 향후 국가의 성평등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평가는 평가대상과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본 연구의 평가대상은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작성사업임
 - 평가목적은 기관평가의 경우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는 반면 사업평가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환류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기관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하며,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양식이 다르므로 평가기준 역시 각각 제시되어야 함

☐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안)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기관 부문	성평등 목표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 및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포괄 정도
	예산증감률		기관 전체 사업의 예산증감률 정도
	사업 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 비율
	예산 규모		전체 예산규모 대비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규모 비율
사업 부문	작성충실도		작성내용 전반의 누락정도
	성평등 목표		사업 목적, 선정사유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부합 정도
	성별구분통계		관련 성별구분통계 사용여부 및 통계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성평등 효과		예산편성결과가 양성평등에 기여하는가 여부
	성과 목표	성과목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치 적절성	산출근거의 내용을 토대로 목표치의 적절성 여부

〈성인지예산서 평가배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예산증감	'12년 대비 '13년 예산 증감 여부	5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34
	성평등 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성평등 효과	'12년 대비 성불평등 감소 여부	5
	성과목표	2항목에 대한 합계	9

□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안)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 및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포괄 정도
	사업 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 수 비율
	결산 규모		전체 결산규모 대비 부처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 규모 비율
	성과목표 달성현황		전체 성과목표 대비 목표달성 비율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작성 내용 전반의 누락정도
	성평등 목표		사업 목적, 선정사유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부합 정도
	성별구분통계		관련 성별구분통계 사용여부 및 통계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평가 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항목에 대한 적절성 총족 여부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치 산출의 타당성 정도 및 목표치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성인지결산서 평가배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성과목표 달성현황	(달성 수*100)/성과목표(지표) 수	100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44
	성평등 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평가	3항목에 대한 합계	9
	성과목표 달성현황	2항목에 대한 합계	21

■ [성과목표 달성현황 배점 방법]

(단위: 점)

달성률 목표치	120%이상	119~100%	99~80%	80%미만	미기재
우수	15	14	13	12	2
보통	11	10	9	8	2
미흡	7	6	5	4	2
미기재	3	3	3	3	0

□ 평가기준

- 기관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며, 기관평가의 점수는 해당 기관의 사업평가 점수의 평균과 기관부문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하며, 사업평가의 점수는 사업부문 점수를 토대로 산출함.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개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함

□ 평가대상

-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34개 중앙행정기관, 275개 사업 및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34개 중앙행정기관, 241개 사업임

□ 기관평가결과

- 성인지예산서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분석됨.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경찰청이 ‘우수’ 등급 이상으로 분석됨

□ 사업평가결과

- 우수사례의 주요 작성기관은 여성가족부(예산서 우수사례의 40%, 결산서 우수사례의 70%)로 분석됨. 여성 정책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6. 결론 및 정책과제

- 성인지예산제도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음. 그 과정에서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관한 개념 정립, 제도에 관한 공감,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성별구분통계의 구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사업들의 예산증액, 성별수혜격차 감소 등과 같은 많은 성과를 낳았음.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아울러 해당 방안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그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이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음.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상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러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이며, 사전분석 및 자문회의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임.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의 공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평가방법의 발전 및 결과 환류 필요
 -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과정 필요
 - :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의 평가목적 및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적임. 제도 주체들 간의 협력 체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기관을 유형화하여 평가 실시
: 현재 작성기관들을 보면, 대상사업 수나 예산규모에 있어 기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기관을 유형화한 후 유형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형별로 평가결과가 제시될 경우, 동일 유형의 기관끼리는 벤치마킹이 가능하며 미흡기관의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기관에 환류,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홍보
: 기관별·사업별 평가결과를 기관에 환류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유도함. 작성지침이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환류과정에 강제력을 부여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는 제도에 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II. 주요 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9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12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12
나. 평가기준	14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6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16
나. 평가기준	18
3. 고용영향평가제도	20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21
나. 평가기준	23
4. 기타 국내외 선정기준	25
가. 스페인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25
나.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	26
5. 시사점	30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시사점	30
나. 평가기준에 대한 시사점	33

Ⅲ.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35
1.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37
2.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42
Ⅳ.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및 평가결과	51
1. 기관 및 사업 평가의 필요성	53
가.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관 및 작성사업 평가의 필요성	53
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현황 및 구성	55
2. 기관 및 사업 평가기준(안) 개발	59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59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66
3. 기관 및 사업 평가결과	74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결과	76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83
Ⅴ. 결론 및 정책과제	91
■ 참고문헌	99
■ 부 록	103
<부록 1>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목록	105
<부록 2>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목록	115
■ Abstract	127

표 목 차

<표 I -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과정	5
<표 II-1>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변화	13
<표 II-2>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	15
<표 II-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변화	18
<표 II-4>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평가 기준 및 내용	20
<표 II-5>	우선 평가대상 정책 세부 선정기준	22
<표 II-6>	고용연계성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의 설정 원칙	24
<표 II-7>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G+척도(젠더 관련성)	26
<표 II-8>	수혜대상의 특정성과 사업효과의 직접성을 고려한 사업의 분류 ...	27
<표 III-1>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37
<표 III-2>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의견	40
<표 III-3>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43
<표 III-4>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48
<표 III-5>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사업 분류	49
<표 IV-1>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의 변화	56
<표 IV-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현황	57
<표 IV-3>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60
<표 IV-4>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 기관	64
<표 IV-5>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 사업	64
<표 IV-6>	성인지예산서 평가배점 : 기관	66
<표 IV-7>	성인지예산서 평가배점 : 사업	66
<표 IV-8>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68
<표 IV-9>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 기관	71
<표 IV-10>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 사업	72

<표 IV-11> 성인지결산서 평가배점 : 기관	73
<표 IV-12> 성인지결산서 평가배점 : 사업	74
<표 IV-13>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배점 방법	74
<표 IV-14> 성인지예산서의 부문별·항목별 평가결과	76
<표 IV-15> 성인지예산서 기관 평가결과	77
<표 IV-16> 성인지예산서 작성 우수사례 : 점수 평균 상위 20위	79
<표 IV-17> 성인지결산서의 부문별·항목별 평가결과	83
<표 IV-18> 성인지결산서 기관 평가결과	84
<표 IV-19> 성인지결산서 작성 우수사례 : 점수 평균 상위 20위	85

그림 목 차

[그림 I-1] 연구체계	7
[그림 II-1]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21
[그림 II-2] 성평등 지표 SWOT분석 틀	29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배경 및 목적

여성정책의 세계적 추이는 성평등 달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접근방법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에 중점을 둔 여성중심의 전략이었다면 현재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녀의 역할과 지위를 의미하는 젠더관계가 특정영역의 개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이슈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고유 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표면적으로는 그 프로그램과 관련 없어 보이더라도 교차이슈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그러한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수단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특정 성(specific gender)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사업에 있어서도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여성을 위한 예산을 양적으로 확장하고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조선주 외, 2012).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성인지예산제도는 법·제도적인 기반 확충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처럼 현재 정부차원에서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등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서가 사업별 설명자료의 취합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김영옥 외, 2010; 조선주 외,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10)부터 작성절차의 체계성 부족, 성평등 목표·성별구분통계·성과목표 등의 작성상의 충실도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문제점들 중에서 매년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사항은 대상사업 선정(국회예산정책처, 2009; 국회예산정책처, 2010; 국회예산정책처, 2011b) 및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김규옥, 2011; 국회예산정책처,

4 ●●●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2012b)에 관한 내용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표 I-1>을 보면,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과정은 크게 작성이전단계와 작성단계, 작성이후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성인지예산 편성 및 국회제출, 성인지결산 실시 및 국회제출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시행의 도구와 절차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성양식 개발·작성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작성이전단계와 작성단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단발적으로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작성이후의 단계와 작성이전의 단계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실제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은 21세기 공공부문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감사연구원, 2006).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별도의 평가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김규옥(2011)은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표준적인 사업 분석 및 평가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영옥 외(2010)는 성인지예산제도는 단기적인 사업이거나 한 차례의 재정 운용 방향의 제시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성숙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재경 외(2011)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과 결과보고가 전시행정이나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체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평가결과가 기관 및 사업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 모든 측면을 망라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고 없이 인프라 중심의 연구만 진행된다면 제도는 질적인 제고 없이 형식적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실제 작성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그 작성 실익을 분석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작성기관 및 사업평가를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 실제 적용하여 그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평가의 목적은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대상으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별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내용을 각 기관에 환류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그 기준을 적용해 본 시범연구(pilot study)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해당 기준 및 모형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표 I-1〉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과정

구분	작성이전단계	작성단계	작성이후단계
성인지예산서	1. 작성지침 및 양식 송부	3. 작성교육 및 컨설팅 실시	5. 검토 및 국회제출
	2. 대상사업 선정	4. 작성 및 제출 취합	
성인지결산서	1. 작성지침 및 양식 송부	2. 작성교육 및 컨설팅 실시	4. 검토 및 국회 제출
		3. 작성 및 제출 취합	

주 : 상기 과정은 성인지예산 편성 및 국회제출, 성인지결산 실시 및 국회제출까지의 과정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합리적인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대상사업 선정기

6 ●●●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준 및 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였다(Ⅱ장). 둘째,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작성된 대상사업들을 적용하여 현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을 진단하였다(Ⅲ장). 셋째,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를 위한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안)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확정된 평가모형(안)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적용되었으며, 평가결과를 기관평가결과와 사업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Ⅳ장).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활용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Ⅴ장).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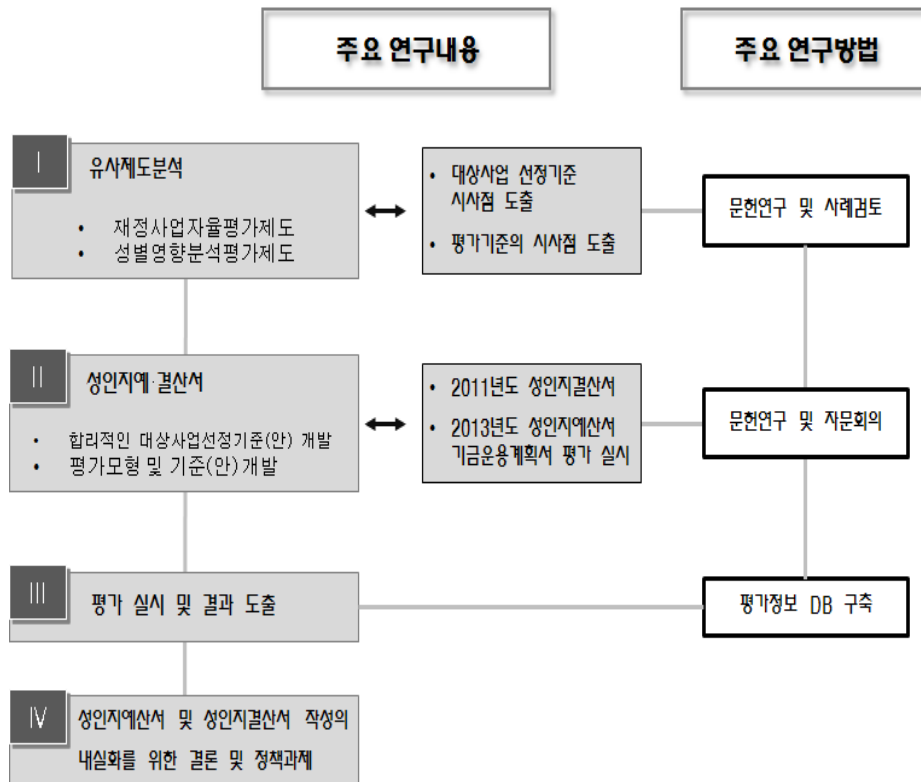
첫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합리적인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관련 제도들을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현재까지 국회에 법정서류로 제출된 성인지 예·결산서(『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분석하였다.

둘째,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로 개발된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모형을 수정·확정하였으며, 이러한 상호검증 과정을 통하여 평가모형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확정된 평가모형을 토대로 평가단을 구성¹⁾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DB로 구축하였다. 기관의 성평등 목표, 사업 수, 예산규모, 사업별 작성충실도, 성평등 목표, 성별구분통계,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등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를 DB로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1) 평가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연구진 및 평가 전공인 행정학과 교수, 여성정책전문가,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로 활동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과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 -1] 참조).



[그림 I -1] 연구체계

II

주요 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12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6
3. 고용영향평가제도	20
4. 기타 국내외 선정기준	25
5. 시사점	30

본 절에서는 국내의 주요 평가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이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검토할 구체적인 제도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등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를 주체로 실시되는 재정사업 부문의 자체평가제도이다. 추진절차는 기획재정부가 사업별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제시하면 각 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제출, 기획재정부가 기관의 평가결과를 점검하여 예산편성에 연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현재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평가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감사연구원, 2006). 다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요구, 사회·경제적 차이를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정책개선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추진주체는 여성가족부이며, 기관별로 분석평가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사업에서 법령,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으로 평가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상과제의 범위와 수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재정운용과 정책에 있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선주 외, 2011).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평가제도 가운데,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정책의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요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제도와 더불어 고용영향평가제도 등 관련 국내외 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평가기준 연구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²⁾는 사업 수행기관이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평가대상기관은 정부업무기본법 상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11년의 경우 39개 기관, 474개 재정사업(일반재정 405개, 정보화 69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 평균점수 및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2012b).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은 3년을 주기로 변경된다. 각 기관에 서는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중 1/3을 매년 선정하여, 선정된 성과목표에 포함된 관리과제(단위사업)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사업의 단위를 세세함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의 단위사업으로 변경되었다³⁾. 원칙적으로 평가대상 사업은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과 같다.

-
- 2)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재정성과관리제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구성된 4대 재정혁신을 추진하였다. 이 중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2003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2005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2006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한국조세연구원, 2008).
 - 3) 예산체계가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목·세목」의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변경되면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사업단위 역시 변경되었다.

〈표 Ⅱ-1〉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변화

연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2005년~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적용제외사업)은 제외 • 원칙적으로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세세항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억 미만이라도 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 포함 • 세세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쳐서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사업범위 재조정 가능
적용제외사업 선정기준 (2005년~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기본사업비 중 경상적인 행정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경상적인 행정경비가 아닌 주요 사업비 성격의 기본사업은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적용대상에 포함 - 인건비, 경상경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구축이 완료된 이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평가 •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자치단체 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금, 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평가(행정자치부) 대상에 포함 • 정부 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지출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2007년~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단,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있도록 필요 시 사업을 나누거나 합치는 등 재조정
적용제외사업 선정기준 (2011년)	<p>【일반재정사업】</p> <p>인건비, 기본경비, 기금운영비, 국제기구분담금,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p> <p>【정보화사업】</p> <p>단순 PC교체 및 통신회선료 등 간접비 성격의 사업(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교체, 통신회선료, 기관 홈페이지 운영, 직원 정보화 교육 경비 등)</p>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2008), 기획재정부(2012a)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성한 것임

<표 II-1>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해주는 대신 제외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면 적용제외사업의 선정기준을 평가해야 한다. 적용제외사업 선정기준은 연도별로 약간씩의 변동은 있지만 인건비·기본경비 및 사업비는 매년 제외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식약청의 ‘수입대체경비’, 보건복지부의 ‘연구기획관리’, 외교통상부의 ‘외교통상 행정혁신’ 사업 등이 그 예이다(한국조세연구원, 2008).

나. 평가기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모형은 <표 II-2>와 같다. 평가대상 사업부문은 일반재정과 정보화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두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항목 11개와 정보화 부문에만 적용되는 정보화 특성항목 2개로 구성된다.

〈표 Ⅱ-2〉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지표

(단위: 점)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일반재정	정보화
계획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2.00	2.0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00	3.0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5.00	5.00
		소계	10.00	10.00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5.00	5.0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00	5.00
		소계	10.00	10.00
관리 (30)	사업관리의 적정성 (30)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15.00	12.00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10.00	5.00
		3-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5.00	5.00
		3-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가?	-	8.00
		3-정보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가점(+3)
		소계	30.00	30.00
성과 /환류 (50)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 결과의 환류 (5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30.00	30.00
		4-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10.00	10.0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하였는가?	10.00	10.00
		소계	50.00	50.00
계		100.00		

자료 : 기획재정부(2012a)

평가는 크게 계획, 관리, 성과 및 환류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항목 모두 공통 평가항목이다. 그러나 이 중 ‘사업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경우 사업부문에 따라 평가지표 및 배점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특성 상 개별 사업단위로 적용되는 평가지표이므로, 기관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는 찾기 힘들다.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⁴⁾되어 제시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 2에 근거하고 있다. 적용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이며, 2005년 본격 시행된 이후 참여기관과 평가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현재 293개 기관이 참여하고, 2,954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12). 구체적인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대상사업 선정방식은 여성가족부가 지침을 통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해주면, 각 기관이 기관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제도 도입 이후 이러한 방식이나 내용에서 큰 변화없이 일관되게 적용되고는 있으나, 2009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김근세 외, 2010). 2009년부터

4)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의 5등급으로 산출된다.

터는 지침 외에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에는 과제선정 추진체계가 자율과제 선정방식에서 자율과제·필수과제 병행방식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까지는 각 기관이 대상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자율과제 선정방식이 운영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선정되는 과제의 대부분이 기관의 핵심사업이 아닌 주변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김경희 외, 2011).

이에 2011년부터는 이러한 자율과제 방식에 ‘의제선정·전문가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과제 방식은 여성가족부가 연도별 의제를 선정하여 의제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각 기관에 지정·통보하는 방식으로, 2011년 지정과제 분야는 ‘일자리와 안전 관련 사업’이었다. 연도별 의제는 양성평등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높은 특정 분야에서 선정되며, 2011년의 경우 정부의 정책 중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효과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자리사업이, 해마다 발생하는 폭력 및 강력범죄에 여성이 특히 취약한 점을 반영하여 안전사업이 지정과제로 선정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변화

연도	선정방식	선정기준
2005년	자율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별에 따라 수혜도 편차가 큰 정책 • 양성평등 관련 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 기타 기관장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책
2006년 ~ 2008년	자율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규모가 크며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정책 • 관련통계 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격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정책 • 수혜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중요정책
2009년 ~ 2011년	자율선정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 관련 통계상 정책수혜도의 성별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또는 향후 성별격차의 발생우려가 있는 정책 • 수혜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중요정책
2011년	지정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사업 예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인턴 양성사업’ • 안전사업 예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2012년	자율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분석평가 대상, 다만 기관운영·관리 및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은 제외 •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은 분석평가 대상, 다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제외 • 인적대상사업, 시설설치·개선사업,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분석평가 대상, 다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주 :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이 정부사업에서 소관법령,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계획 전반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2012년 대상과제 선정방식은 기존의 자율방식으로 재변경되고, 대상정책 선정기준에서 제외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자료 : 김경희 외(2011), 여성가족부(2012)의 일부 내용을 발췌, 수정하였음

나. 평가기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평가는 각 기관에서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

을 말한다. 평가의 목적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분석평가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연계성을 강화함에 있다.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담당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여성가족부, 2012). 구체적인 종합평가 기준은 <표 II-4>와 같다.

평가기준은 해마다 일부 변경되어 왔으며, <표 II-4>는 2011년 평가기준이다. 평가기준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평가보고서’ 항목은 ‘과제의 적정성, 평가내용 구체성 및 타당성, 정책대안의 현실성’ 지표로 구성된다. ‘과제선정’ 항목은 ‘의견수렴노력, 평가과제 수’, ‘운영활성도’ 항목은 ‘참여도’, ‘정책반영도’ 항목은 ‘평가결과 반영 실적’ 지표로 구성된다.

우수기관의 경우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각 기관의 평가점수를 서열화하여 우수기관이 선정된다. 또한 우수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한편 우수사례의 평가기준은 <표 II-4>의 ‘평가보고서’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구체적인 지표는 ‘과제의 적정성, 평가내용 구체성 및 타당성, 정책대안의 현실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 후,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기관과 마찬가지로 유형별(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표 II-4〉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평가 기준 및 내용

(단위: 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지표	평가방법		
과제선정	① 의견수렴노력	● 평가계획 수립 시 기관 내외의 의견수렴 노력 정도	5	15
	② 평가과제 수	● 자체 평가 및 심층 평가 과제 수	10	
평가 보고서	③ 과제의 적정성	● 지침의 기준(중요한 정책, 성별격차예상)에 따라 과제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10	50
	④ 평가내용 구체성 및 타당성	● 성별구분통계, 근거법령·지침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제시 정도 ● 지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였는지 정도	20	
	⑤ 정책 대안의 현실성	● 평가결과 제시한 정책 대안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정도	20	
운영활성도	⑥ 참여도	● 담당자 교육, 워크숍 참석률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여부	10	10
정책반영도	⑦ 평가결과 반영실적	● 평가결과를 법령 등 정책개선으로 연계, 반영 정도	25	25

자료 : 여성가족부(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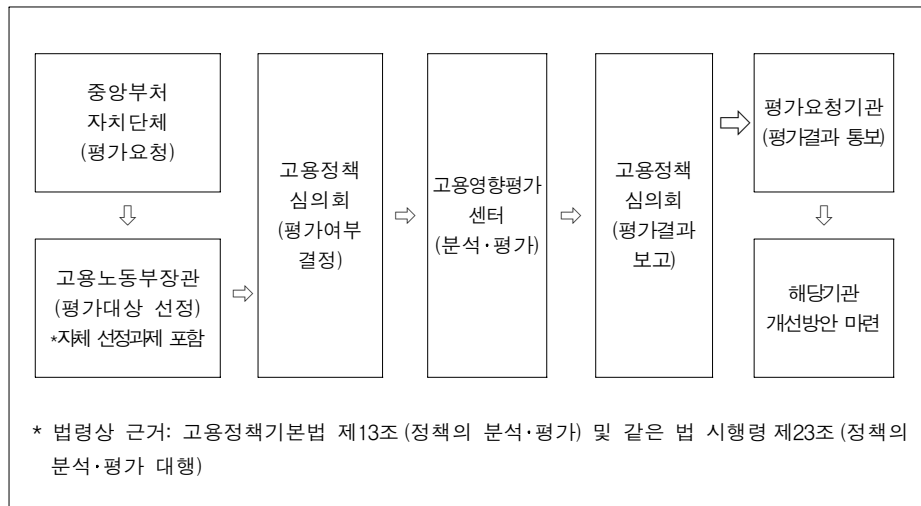
3.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10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되었다. 국가 지자체의 주요 사업 정책 및 법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추진근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정책의 분석 평가)이다. 2010년 4월, 고용영향평가 시범 실시(7개)하였으며, 26차(2010.8.13), 28차(2011.6.30)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보고하였다. 2011년 6월에는 2011

년 고용영향평가 본 사업 실시(19개)하고, 31차(2012.3.6), 33차(2012.9.6)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보고하였으며, 2012년 2월에 2012년 고용영향평가 본 사업을 실시(14개)하였다.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영향평가는 자체평가, 요청평가와 선정평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요청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고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선정평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요청평가는 정책의 사전·중간·사후평가가 가능한데 반해, 선정평가는 정책의 중간·사후평가만 가능하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전적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평가의 절차는 [그림 Ⅱ-1]와 같다.



[그림 Ⅱ-1]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에서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 두 번째는 정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계속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정책, 세 번째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고 분석·평가결과 활용도가 높은 정책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표 II-5〉 우선 평가대상 정책 세부 선정기준

- 정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정책
 - 기업의 투자촉진, R&D 지원정책 등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투자행위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
 - 지역개발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이 되는 정책
 - 교육·인적자원 개발 사업 등 양질의 노동을 공급하거나, 각종 복지정책 등 경제활동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각종 세제(법인세, 소득세 등),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등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쳐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 시행 중인 정책을 우선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이 완료된 정책에 대하여도 평가

상기와 같이 진행된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2010년 시범사업 이후 3년간 총 40개 평가과제 진행되었다. 일반과제 31개, 기초연구 9개이다. 40개 평가과제 중 20개는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에서 자체 연구책임 하에 수행되었으며, 20개는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 수행되었다.

평가대상 유형별 과제를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 등 SOC사업분야 4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 정책지원분야 21개, 동대문디자인플라자건설 등 지자체사업분야 6개, 제도개선분야 9개 등이다. 소관부처별 평가대상과제는 지식경제부 등 총 12개 중앙부처의 34개 정책 및 사업이 평가대상이며, 지자체별 평가대상 과제는 경상남도 3개 사업 등 총 4개 지자체의 6개 사업이 평가대상이다.

나. 평가기준

고용영향평가모형은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다. 고용연계성평가와 고용효과 실태조사(전문가 및 사업관계자 심층면접조사 포함)는 기존 계량모형 중심의 평가모형에서 벗어나 다차원 고용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용연계성평가는 정부정책과 사업집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고용유지 및 창출 가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다. 주로 기존 연구와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의 구조와 특성을 고용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정성적평가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용연계성평가는 해당 정책과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례를 고용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고용친화적 정책개발에서 해외 사례가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방법으로는 I-O모형(단기분석), 일반균형모형(중기분석), 회귀분석모형 등 다양한 정량적 방법을 활용한 일자리증감 분석 등이 있다. 중점 평가사항으로는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 등 산출이다.

주요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직접 고용인원(direct employment figures), 일자리의 질 평가, 간접 고용인원(indirect employment figures), 고용자와 취업자 분리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⁵⁾. 특히 고용연계성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은 고

5) 직접 고용인원은 상시고용 근로자(Full Time Equivalents: FTE)의 연인원 (man-year) 규모로 추정 또는 산출된다. 일자리의 질은 임금, 근로시간과 숙련수준 등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하나 이용 가능한 자료(available dat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효과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과 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규모), 직종별·학력별·근속년수별 근로자 분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된다. 정부조달구조의 간접 고용인원은 정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를 생산하는 공급자에 의한 간접적 고용창출과 고용유지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SOC 구축에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은 정부조달구조에 있는 민간기업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한다. 주로 제1차 조달기업의 간접 고용효과를 추정하려고 하나, 일반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실태조사 영역으로 남아 있다. 고용효과 지표에서 고용자와 취업자는 분리 적용된다. 한국은

용 적합성, 고용유지 그리고 일자리의 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고용적합성은 정책 및 사업집행으로 나타나는 고용구조 특성 등을 주로 평가한다(<표 II-6> 참조).

〈표 II-6〉 고용연계성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의 설정 원칙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해설	평가방법
정책 고용 연계성	고용적합성	- 정책집행으로 나타나는 고용구조 특성	- 정책 집행으로 나타나는 고용상의 특징	정량, 정성
		- 정책집행의 고용 적합성	- 정책집행에 고용창출 고려 여부	정량, 정성
	고용유지	- 정책의 고용지속성	- 정책시행 중 혹은 수혜 종료 후 고용유지 가능성 - 정책의 고용측면 사중손실	정량, 정성
	일자리의 질	-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 창출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상용직, 일용직의 여부)	정량, 정성

자료 : 주문현(2012)

행 「산업연관표」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와 취업자 정의가 상이하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자는 1년간 고용되거나 자영업 등 사업을 경영한 자이고, 취업자는 연인원(man-year) 개념이다. 반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 1시간 이상 근로 행위를 한 자”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정책과 사업의 전후방연쇄효과에 따른 산업연관관계의 고용유발효과 분석이 중요하다. 때문에 평가지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표 기준 연인원(man-year)를 사용하고 있다.

4. 기타 국내외 선정기준⁶⁾

가. 스페인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스페인 지방정부(안달루시아)에서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G+척도(G+scale)를 적용하고 있다(<표 II-7> 참조). 이 척도는 정부의 모든 예산 프로그램이 젠더 민감성(sensitivity)과 관련성(relevance)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정부 내부의 행정업무를 위한 사업이나, 대상 인구의 범위가 작고 단순한 집행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은 특별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에 같은 수준의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성평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G+척도의 사업 분류기준은 젠더 민감성(gender sensitivity)과 젠더 관련성(gender relevance) 등 두 가지이다. 젠더 민감성은 예산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하며, 젠더 관련성(gender relevance)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한다. 첫번째는 변형력(Transformative capacity)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며, 두 번째는 영향력(Capacity for impact)으로 대상인구의 범위와 파급 효과이다. 세 번째는 기능적 관련성(Functional relevance)으로 성불평등 문제와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행정관리(Personnel management)로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다.

6) 본 절은 김영옥 외(2008)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편집·재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7〉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G+척도(젠더 관련성)

구분		응답 유형	
		Yes	No
젠더관련성 (Gender Relevance)	낮음 (Low)	g1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g0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프로그램
	중간 (Medium)	G 파급효과가 적고(대상인구 적음) 예산비중이 크지 않고 성불평등 과의 관련성 낮음	-
	높음 (High)	G+ 예산 규모가 큰 사업,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성불평등 관련성 높음	-

자료 : 김영옥 외(2008)에서 재인용함.

나.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김영옥 외(2008)가 유일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옥 외(2008)에서는 성인지적 예산분석 도구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을 수혜대상의 특정성과 사업효과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수혜대상의 특정성이란 사업의 대상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단체, 기관으로 특정화되고 한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사업효과의 직접성은 사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의 직접적인 측정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키면 사업들은 다음 <표 II-8>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II-8〉 수혜대상의 특정성과 사업효과의 직접성을 고려한 사업의 분류

수혜대상 사업효과	특정성	비특정성
직접성	<p>유형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과 가구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 예) 장애아 교육지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저소득층 연탄보조, 알콜상담 센터 운영 	<p>유형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수혜자가 개인, 가구, 단체, 기관 등으로 특정화되지 않고 그 효과가 일정 지역 일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쓰레기 소각시설
간접성	<p>유형 I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수혜자가 단체나 기관으로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사업 예) 단체, 기관 지원 	<p>유형 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예)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 대외교류협력, 도로건설, 문화재 보존관리, 생태계 보호

자료 : 김영옥 외(2008)에서 재인용함.

유형 I 은 수혜대상자가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가구이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로 특정화될 수 있고, 그 효과를 이러한 특정화된 수혜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장애아 교육지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가구, 대체로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이나 현물지원 사업,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 시민이용 시설 관련 사업,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이 유형의 사업에 포함된다. 이 유형의 사업은 수혜자의 성별구분통계자료만 확보된다면, 성별 수혜자, 예산의 배분, 욕구와 만족도 조사, 그리고 성평등에 미치는 효과와 사업과정에서의 성 주류화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유형 II는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유형 I처럼 특정화되지 않지만, 지역 일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와 같은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개인, 가구, 단체, 기관 등 수혜자의 경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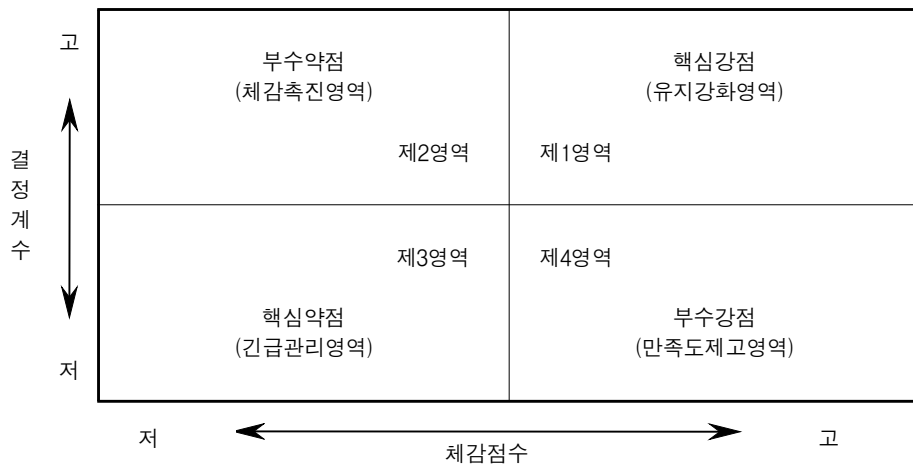
명확한 범주의 집단보다는 특정 지역 일대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의 사업과 달리 수혜자는 지역 일대의 주민이 되므로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하고 성별에 따른 예산배분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별다른 지역적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들의 성별 분포는 대체로 균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별도의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수혜자의 욕구 부합성과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 성평등에 대한 효과, 성 주류화를 분석할 수 있다.

유형 Ⅲ은 사업의 수혜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대학, 초·중등학교 등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특정 개인에게만 귀착되지 않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사업은 사회의 부패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을 가진 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그 활동의 효과를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수혜의 성별 귀착이 아니라 성평등에 미친 효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분석의 부담과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 된다.

유형 IV는 수혜대상이 개인, 집단, 단체 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의 효과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도 않고, 간접적이어서 네 가지 유형 중 분석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다. 예를 들어 산업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은 외국 선진물류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물류분야 국제협력, 비즈니스 파트너 알선, 수출입물류비 등 산업물류 실태조사 등 다각도의 복합적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는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산업기반시설, 생태계, 산림보호 등 자연환경보존 사업 역시 개별 사업의 효과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수혜대상자 역시 특정 집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사업수혜자의 특정성과 사업효과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 사업들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수혜자가 명확하고 사업효과가 직접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유형 I의 사업에 대한 분석이 가장 손쉽고 간편하므로 이 범주의 사업들이 가장 우선적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을 직접분류하지 않았지만 대상 사업을 선정 및 분류하는데 참조할 만한 연구로서 김형준 외(2008)의 연구가 있다. 이는 성평등 지표의 SWOT을 분석한 연구이다([그림 Ⅱ-2] 참조).



자료: 김형준 외(2008)에서 재인용함.

[그림 Ⅱ-2] 성평등 지표 SWOT분석 틀

제1영역은 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국민들의 성평등의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성평등 제고를 위한 한국사회의 핵심강점으로 여겨지는 이상적인 영역으로 유지·강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제2영역은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으나 성평등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부수약점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체감촉진 영역이다. 제3영역은 체감도도 낮고 국민들의 성평등인식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다. 우리사회에서 성평등 제고에 가장 약점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긴급하게 관리되어야 할 영역이다. 제4영역은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으나 성평등인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정책효과를 강화하여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할 영역이다.

연구결과 제1영역은 인터넷활용, 문화생활, 교육기회, 제2영역은 경제활동, 가사노동, 취업, 폭력노출, 정치참여, 진급으로 나타났다. 제3영역은 건강관리, 제4영역은 고위직참여, 안전, 보육, 임금, 비정규직, 소득, 주요결정참여로 나타났다.

5. 시사점

지금까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등의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시사점

먼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대상 제외사업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예시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평가대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한국조세연구원, 2008).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지침에서 제시되는 대상과제의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대상과제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김근세 외, 2010)⁷⁾.

7) 김근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모호성이다. 지침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상과제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09년부터 도입된 대상사업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는 그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있었다. 둘째, 과제선정과정의 문제점이다. 선정과정에서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편의적으로 선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지침 전달시기와 평가 담당자의 교체시기가 중복됨으로써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넷째, 대상사업을 선정하더라도 담당부서의 협조를 구하기가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대상사업보다는 업무협조가 용이한 부서의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 여성가족부의 역할 문제와 과제선정위원회의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

선정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할 경우 각 기관마다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하지 못한 사업이 대상사업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예·결산서를 작성해야 할 사업이 제외될 수도 있다.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전년도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이다.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기관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일부 기관에서는 대상사업에 포함되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포함되는 반면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각각 다른 제도임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대상사업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원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지 예·결산서 미작성 기관에 대한 시사점이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중앙행정기관은 34개 기관이다. 2010년도 29개 기관, 2011년도 34개 기관, 2012년도 34개 기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작성 기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은 당연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은 기관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밝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강제성이 적고, 미작성 시 제재가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사실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담당 공무원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업무가중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3년을 주기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는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할 대상과제의 범위와 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각 기관별 평가과제를 1개 이상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에는 각 기

관별 평가과제를 2개 이상 선정(이 중 1개 과제는 반드시 예산사업 과제를 포함),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5개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기관별 3개 이상, 교육청은 기관별 1개 이상을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목적에 적합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담당 기관이나 공무원의 성평등 의지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앞서 제시한 유사평가제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성에 있어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과제선정의 방법에 관해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이를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다. 통보한 대상사업 외에 자율적으로 대상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 2010년까지 과제선정위원회 등의 자문을 통해 대상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제선정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업무협조가 용이한 부서의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거나(김근세 외, 2010) 핵심사업이 아닌 주변사업만 선정되는(김경희 외, 2011)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2011년부터는 지정과제 방식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영향평가에서 우선 평가대상 정책을 선정하는 방식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대상사업 선정 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자율적으로만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추진방식 안에서 다양한 과제선정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시사점

평가기준에 관한 첫 번째 시사점은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기관에서 재정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해 확인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⁸⁾.

그러나 자체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평가내용이 관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기획재정부, 2012a).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는 기관에서 작성한 예·결산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와는 그 평가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떤 평가이던 평가부분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체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영철(2010)은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 유형 간의 중첩성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감사연구원(2006) 역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중복평가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추진된 평가의 합목적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영향평가지표는 사업담당공무원이 자체 평가를 하기에는 지표 및 분석방법이 어려우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예·결산서 작성의 업무 부담만으로도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평가 업무까지 가중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평가 초기에는 제도 주체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간략히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자체

8) 원칙적으로는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을 수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평가결과가 예산에 실질적으로 연계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성채 외(2012)의 연구를 보면, 2007년 275개 평가대상 사업 중 연속성이 있는 230개 사업에 대해 2009년 예산의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오히려 예산액을 감소시킨 경우가 25%, ‘매우 미흡’ 및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액을 증가시킨 경우가 13.7%에 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평가와 예산의 연계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도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평가와 결합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체계와 결과활용에 관한 부분이다. 두 사례의 평가지표를 보면, 매년 평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가중치, 평가등급 등을 약간씩 수정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매년 일부 양식이 변경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사전에 평가내용 및 지표를 공지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이후 반드시 환류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에는 선정된 우수기관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평가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환류 과정이 필요하며,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가를 통해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III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 | | |
|----------------------|----|
| 1.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 37 |
| 2.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 42 |

1.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현재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상사업 협의 과정을 거쳐 기준이 선정되면, 전문가의 대상사업 검토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각 기관에 통보되는 하향식(Top-down)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대상사업 기준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이다.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에는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성인지예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래로 대상사업 선정절차나 기준에 있어 큰 변화는 없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표 Ⅲ-1〉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사업 • 성별영향분석사업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

자료 : 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2009, 2010, 2011, 2012)

2010년도에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양성평등사업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권익증진사업, 기타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며⁹⁾, 성별영향분석사업은 양성평등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사업(기금 제외) 중 성별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많아 2011년도에는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변경하였다.

2011년도에는 전년도 작성사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2010년도의 양성평등사업이나 2011년도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은 모두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 자체의 내용이나 예산 규모 등을 통해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나 의지 등을 가늠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업(성별영향분석사업)들의 경우 사업 고유의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구분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 틀은 2013년도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기타 성별영향분석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각 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및 매뉴얼 참조).

2011년도의 경우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 개선의 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사업에는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일자리 지키기, 나누기, 고용촉진,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2012년도의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은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성별

9) 양성평등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조에 따른 여성정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고용노동부), 여성농어민육성종합계획(농림수산식품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등 기타 각 부처의 성평등 관련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의미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의 개선 의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취업지원·일자리사업(인턴제,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불평등의 개선 의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중 예산산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전년도 작성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작성사업 중 분석의 용이성과 실익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에 대한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변경이 유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¹⁰⁾

이러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김영옥 외(2010)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모호성과 둘째, 현재 작성 중인 대상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양적 확대 중심의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을 밝히며, 모든 재정사업이 대상사업인 것은 맞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모든 사업이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년도 사업을 검토 없이 일단 포함하고 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업이 계속해서 작성이 되고 있고 동시에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사업 선정절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법정서류인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I.개요에는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음

10) 전년도 대상사업의 작성 실익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대상사업이 단년도를 기준으로 변경될 경우 시계열적 정보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김규옥(2011)은 대상사업에 많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상사업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예·결산서가 작성되고 사업의 변경기간은 최소한 3~5년 단위로 설정하여 잦은 변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으로 여성가족부가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조정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로 인식되어져 담당 공무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가 반드시 공식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임주영 외(2012)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다면 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성별수혜자나 사업대상자의 통계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거나, 대상사업 선정에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다보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다음의 <표 Ⅲ-2>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개선을 위한 각 계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의견

관점구분	문제점	내용
국회관계자	쟁점 중심의 대상사업 선정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쟁점 발굴 ○ 예산 심사 쟁점의 형성
담당 공무원	대상사업의 타당성 제고	○ 명확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대상사업 선정 전 사전조사 및 준비
해외전문가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범위 확대

자료 : 김영옥 외(2010) 중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필자가 재작성함

우선 국회 관계자의 경우, 쟁점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심사의 쟁점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사업의 양적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며¹¹⁾, 정부 정책 중에서 성불평등 문제와 관련성이

높거나 긴급한 측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쟁점을 형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정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 이전에 면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전 절차 이후에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야 담당자들에 대한 설득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상사업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은 여성의 수혜가 특히 취약한 사업,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사업, 여성의 비중이 30% 이하인 사업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해외전문가의 경우 현재 작성되는 사업의 범위가 특정 범위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되 대상사업의 적용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분석이 요구되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조선주 외(2012)의 연구를 보면,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전분석 및 시범분석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3년도의 경우, <표 III-1>에서 보았듯 기타 성별영향분석사업에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과 미실시 사업을 구분하여 통계작성에 미친 영향과 여성수혜자의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여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기존의 작성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을 달리하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

11) 이러한 의견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내용(2009, 2010, 2011b, 2012b)과 일치한다.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였다.

2.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정부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한 자원배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예산이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평등을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통하여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경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의도하지 않게 정부의 지출이 성평등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인 경로이다. 전자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기준에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이 해당되며, 후자의 경우는 이를 제외한 모든 일반예산사업이 해당된다(박노욱 외, 2008).

성인지예산제도는 특히 일반예산사업에 주목한다. 성중립적인 예산을 사용해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의도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경 외, 2009). 성평등과는 무관해보이는 사업들이 오히려 사회에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를 구조화시킬 수 있다(김영옥 외, 2010). 이러한 내재화된 불평등 문제를 끌어내 해결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의 이유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결국 모든 예산사업이 성평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은 모든 재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 모든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교적 쉽게 적용 가능하고, 예·결산서 작성의 실익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그러한 실익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헌연구 및 그 동안의 논의들(임주영 외, 2012; 조선주 외, 2012)을 바탕으로 해당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Ⅲ-3〉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업 내적요인	사업 외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분야 - 사업수단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구분통계의 구축 여부 -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및 제도 이해도 - 기관장의 의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

대상사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 내적요인과 사업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사업내적요인은 성평등과는 무관하게 사업 자체에 관련된 요인들로 정의하였다. 해당요인은 사업분야, 사업수단,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사업분야는 해당 사업이 속해 있는 범주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분야를 적용하였다. 현재 정부의 사업분야는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의 12개 분야로 구분된다(기획재정부, 2012a). 대체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주요 대상분야가 보건, 복지, 교육, 노동, 농업 등으로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일부 사업분야가 주요 대상 분야로 선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또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는 기능별·성질별 예산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별 변수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더라도 사업분야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에 따라 대상사업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분야를 하나의 요인으로 본다.

다음으로 사업수단은 사업의 집행방식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외(2012)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 활용되는 사업수단을 검사·인증·조사·연구, 교류·협력, 교육·훈련, 구매사업, 구조개선, 기관운영지원, 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원, 방지·예방·단속사업, 보상금·보조금, 사회보장보조 및 기타보조금, 시설확충·개선, 신용·융자, 유통·마케팅, 인력양성·운영·활용, 자원유지보전, 정

책연구용역 및 연구사업, 종합사업, 컨설팅제공 및 지원, 통계자료조사 및 제공, 행사, 행정집행, 홍보·방송, SOC 등 2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검사·인증·조사·연구는 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사,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한다. 반면 교류·협력 수단의 경우는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기술 및 업무협력, 조약체결, 협약대응 및 이행, 우호증진 등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며, 교육·훈련은 학업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의식함양, 취업관련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는 수단이다. 다음으로 구매사업은 장비, 공구, 기구, 도서, 미술품 등의 구매 관련 활동이 핵심이 되는 유형이며, 구조개선은 특정 산업분야나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특정 부문이나 부처에 대한 통폐합 및 지원 등을 통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관운영지원은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를 보조하는 형태의 사업수단이며, 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원사업은 여권발급이나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과 같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수단을 의미한다. 방지·예방·단속사업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 또는 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미리 대처하거나 억제하는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보상금·보조금은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같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보조금 지급 관련 활동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보조 및 기타보조금사업의 경우 보상금·보조금 사업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특정 수혜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설확충·개선 수단은 시설 및 건물, 건축물의 설비 확충 및 개선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신용·융자는 개인 또는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 이차보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통·마케팅 수단은 유통과정과 마케팅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산물 출하 조절, 농산물 유통 개선 등이 그 예이다. 인력양성·운영·활용사업은 특정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및 운영과 관련된 활동들을 의미하며,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자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자원유지보전은 국가주요기록물 수집 보조관리, 국립공원 내 생태계 보전, 구조관리체계 구축, 지정지구정비 등의 보존사업과

같은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수단이다.

다음으로 정책연구용역 및 연구는 예산편성 지침 상 용역비에 해당하는 사업수단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기반조성, 연구개발지원, 연구조사지원, 학술행사 개최 등이 있다. 종합사업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연구, 조사등의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컨설팅제공 및 지원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상 농가별 집중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외 사업수단으로는 통계자료조사 및 제공사업이 있다. 통계자료조사 및 제공사업의 경우는 명칭 그대로 통계자료조사 및 통계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 국내외 문화 및 관광행사, 체육행사, 전시 박람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수단을 의미한다.

반면 행정집행은 강제적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 행정 상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압류재산공매사업, 관세청의 관세탈루심사지원, 법무부의 보호관찰 등이 해당된다. 홍보·방송은 정기간행물 발행, 영상자료 배포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홍보활동과 방송제작, 지원, 운영 등 방송산업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SOC의 경우에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업완성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목 및 건설 공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23가지 사업수단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실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박노옥 외, 2012).

사업 내적요인의 마지막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12b)는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성차별 개선효과가 낮거나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사업들을 검토해보면,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사업대상자가 일반인으로 개인의 수혜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로 법제처의 ‘수요자중심법령정보서비스’ 및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도입보조’ 사업이 해당 유형의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인프라성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개인이 아닌 시설의 경우 셋째,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개인의 수혜현황 파악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성평등 효과분석의 실익이 높지 않다고 전제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자의 성별격차 현상이 사업수혜자의 성별격차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그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개선효과가 낮게 나타나 지적된 사업들이다.

이처럼 연구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성차별 개선효과 혹은 성평등 구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크게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과 성불평등 문제 간에는 연계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파악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분석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은 사업 외적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외적요인을 사업 자체와 관련된 요인 이외에 성평등과 관련된 요인들로 정의하였다. 사업의 외적요인은 성별구분통계의 구축 여부, 담당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및 제도 이해도, 기관장의 의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 등이 해당된다.

먼저 성별구분통계는 성인지 예·결산서의 중요한 정보이다. 성별구분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성불평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불평등 문제는 가시화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별구분통계는 성인지예산서의 주요 작성 항목이며, 그 구축여부에 따라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성별구분통계 구축 수준을 감안할 때, 이미 성별구분통계가 구축된 사업의 비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변별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담당공무원의 의식 및 제도 이해도, 기관장의 의지는 제도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한민국정부(2012b)를 보면, 2013년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기관의 대상사업 수나 참여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단 성인지예산제도 뿐만 아니라 예산 제도 자체가 정치적인 타협 또는 협상에 기초하는 문제이므로 기관장의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의지, 정책적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는 각 기관의 사업 담당자들이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제출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되므로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및 이해도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의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은 관련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사업과는 무관하므로 사업 외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여부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효과성을 분석해 본 결과, 사업에 따라 그 효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조선주 외 2012). 전년도 작성사업의 경우, 작성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성수혜자의 비율에 있어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여부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대상사업으로 더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 보다는 대상사업을 선정한 이후 사업별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즉 분석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의 경우 컨설팅이나 교육의 횟수 등을 증가시키는 관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새로운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 제시하였다(<표 III-4>). 즉, 해당 분야 및 사업수단에 따라 정부의 사업을 분류(276개)하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 방향,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중점분야 사업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성별영향분석 및 전문가의 심층분석이 필수로 실시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업 내적요인의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 사업 외적요인들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검토·분석이 어려운 요인들이므로 이를 제외한 사업 내적요인의 사업분야와 사업수단을 활용하여 그 기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기준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에 적용을 해 본 결과, <표 III-5>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Ⅲ-4〉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참고기준																																																																																																																																																																																																																																																																																																										
<div> <div>- (1단계) 사업분야, 사업수단 분류</div>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 colspan="11">12개 사업분야</th></tr> <tr> <th>23개 사업수단</th><th>보건·복지·고용</th><th>교육</th><th>문화체육관광</th><th>환경</th><th>R&D</th><th>산업중소기업에너지</th><th>SOC</th><th>농림수산물식품</th><th>국방</th><th>외교통일</th><th>공공질서안전</th><th>일반공공행정</th></tr> <tr><td>검사인증 조사연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교류협력</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교육훈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매사업</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조개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관운영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방지예방 단속사업</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보상금보조금</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회보장보조 및 기타보조금</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설확충개선</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신용융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유통마케팅</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인력양성운영 활용</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자원유지보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책연구응역 및 연구사업</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종합사업</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컨설팅제공 및 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통계자료조사 및 제공</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행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행정집행</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div> <div>- (2단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 방향 고려</div> <div>- (3단계)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중점분야 사업들을 선정</div> <div>- (4단계)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특성 고려</div> <div>-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 성별영향분석 및 전문가의 심층분석을 필수로 실시</div> </div> </div>											구분	12개 사업분야											23개 사업수단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물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검사인증 조사연구													교류협력													교육훈련													구매사업													구조개선													기관운영지원													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원													방지예방 단속사업													보상금보조금													사회보장보조 및 기타보조금													시설확충개선													신용융자													유통마케팅													인력양성운영 활용													자원유지보전													정책연구응역 및 연구사업													종합사업													컨설팅제공 및 지원													통계자료조사 및 제공													행사													행정집행													<div> <div>- 성별구분통계의 구축 여부</div> <div>-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및 제도 이해도</div> <div>- 기관장의 의지</div> <div>- 성별영향분석 실시 여부</div> </div>
구분	12개 사업분야																																																																																																																																																																																																																																																																																																																				
23개 사업수단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물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검사인증 조사연구																																																																																																																																																																																																																																																																																																																					
교류협력																																																																																																																																																																																																																																																																																																																					
교육훈련																																																																																																																																																																																																																																																																																																																					
구매사업																																																																																																																																																																																																																																																																																																																					
구조개선																																																																																																																																																																																																																																																																																																																					
기관운영지원																																																																																																																																																																																																																																																																																																																					
대민서비스제공 및 지원																																																																																																																																																																																																																																																																																																																					
방지예방 단속사업																																																																																																																																																																																																																																																																																																																					
보상금보조금																																																																																																																																																																																																																																																																																																																					
사회보장보조 및 기타보조금																																																																																																																																																																																																																																																																																																																					
시설확충개선																																																																																																																																																																																																																																																																																																																					
신용융자																																																																																																																																																																																																																																																																																																																					
유통마케팅																																																																																																																																																																																																																																																																																																																					
인력양성운영 활용																																																																																																																																																																																																																																																																																																																					
자원유지보전																																																																																																																																																																																																																																																																																																																					
정책연구응역 및 연구사업																																																																																																																																																																																																																																																																																																																					
종합사업																																																																																																																																																																																																																																																																																																																					
컨설팅제공 및 지원																																																																																																																																																																																																																																																																																																																					
통계자료조사 및 제공																																																																																																																																																																																																																																																																																																																					
행사																																																																																																																																																																																																																																																																																																																					
행정집행																																																																																																																																																																																																																																																																																																																					

〈표 Ⅲ-5〉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사업 분류

(단위: 개, %)

[illegible]

사업 내적요인 중 사업분야와 사업수단을 기준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적용해 본 결과, 내역사업 기준 304개 사업 중 사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복지·고용분야로 전체 사업 수의 37.8%(115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단의 경우에는 인력양성·운영·활용이 81개 사업으로 전체의 26.6%, 교육·훈련이 63개로 20.7%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사업분야는 분야 간 사업 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상사업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수단은 자원유지·보전, SOC 수단의 경우 대상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노옥 외(2012)의 연구에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대상으로 사업수단을 분류한 결과, 검사·인증·조사·연구, 구조개선, 시설확충·개선, 유통·마케팅, 자원유지·보전, 종합사업, 통계자료조사및제공, 행사, 홍보·방송, SOC 수단에서 대상사업을 찾을 수 없었던 결과에 비하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수단이 훨씬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은 모든 예산사업이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표 III-4>의 사업분야 및 사업수단을 기준으로 한 276개 기준 모두 대상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83개를 제외한 193개 기준에서 대상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상사업이 분야 및 수단에 있어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작성 중이지 않은 사업분야나 사업수단의 경우 성평등과는 무관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러한 사업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선될 경우 사회에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관의 경우 현재 작성 중인 사업들의 분야나 수단을 확인한 후, 아직 작성해 보지 않은 새로운 대상사업을 발굴해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나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새로운 대상사업 분야와 수단을 발굴하며, 기존의 작성사업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조선주 외(2012)의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신규사업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선 실시하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작성사업과 미작성 사업을 차별성 있게 접근하여 작성 실익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V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및 평가결과

1. 기관 및 사업 평가의 필요성	53
2. 기관 및 사업 평가기준(안) 개발	59
3. 기관 및 사업 평가결과	74

1. 기관 및 사업 평가의 필요성

가.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관 및 작성사업 평가의 필요성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90여개 국가이다. 이 중 정부차원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한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11개국에 불과하다. 그리고 11개 국가 중에서 정부차원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성인지적 감사(gender audit)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예산서와 결산서를 연계해주거나 이를 평가·활용할 만한 시스템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제도나 정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은 21세기 공공부문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¹²⁾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별도의 평가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김규옥(2011)은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표준적인 사업 분석 및 평가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영옥 외(2010)는 성인지예산제도는 단기적인 사업이거나 한 차례의 재정운용 방향의 제시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제도의 성숙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재경 외(2011)는 성인지예산의 집행과 결과보고가 전시행정이나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체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평가결과가 기관 및 사업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12) 감사연구원(2006)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평가제도는 230개 정도로 파악되었다. 기관평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평가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큰 축이며, 각 분야별로 사전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총괄평가 등의 제도적 평가와 일상적 행정활동으로서 지도, 점검, 인증 평가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부터는 작성 양식에 성과목표에 관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어, 부분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각 기관은 해당 사업의 성평등 정도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목표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 시에는 이러한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실적치를 기재함으로써 일종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과목표(지표)만으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국조세연구원(2006)을 보면, 2003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시행, 예산과 연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특성, 집행상의 문제점, 성과부진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예산편성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2005년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광희(2012) 역시 성과관리와 평가는 상보적 관계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현재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성과지표 미작성에서부터 ‘여성수혜율’에 편중된 성과지표, 사업목적 및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지 않는 성과목표 및 낮은 목표치 설정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조선주 외,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지표만으로 제도를 모니터링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평가과정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관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제도 주체인 기획재정부 및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고 향후 국가의 성평등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기관 및 사업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데이터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2>를 보면 2010년도 29개 기관이 195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이래로 2011년도 34개 기관 245개 사업, 2012년도 34개 기관 254개 사업, 2013년도 34개 기관 275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성인지결산서의 경우 2010년도 29개 기관 195개 사업, 2011년도 34개 기관 241개 사업에 대해 작성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성평등 목표, 성별구분통계,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추진실적이 측정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현재 작성된 성인지예·결산서를 토대로 기관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해당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현황 및 구성

성인지예산서는 다음의 작성 양식으로 변하여 왔다(<표 IV-1> 참조). 성인지결산서는 제도가 발전하면서 단년도의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통해 성인지예산서와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 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성과관리를 강조하여 왔다.

〈표 IV-1〉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의 변화

구분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안) : 2009.8.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변화사항	-	-	2011년도 종합(부처별 집계표) 2012년도 개요(성인지예산서 특징) 종합(부처별 집계표)	개요(성인지예산서 특징) 종합(부처별 집계표)
부처총괄 양식	<div>부처명</div> 1. 성평등목표와 재정운 용 방향 <input type="checkbox"/> 성평등목표설정 배경 <input type="checkbox"/> 성평등복지정책 목표 <input type="checkbox"/> 2010년도 정책 및 재 정운용방향 o 성인지예산서총괄표 o 양성평등사업	<div>부처명</div> 1. 성평등목표와 재정 운용 방향 2. 성인지예산사업 총괄표	<div>부처명</div> 1. 성평등목표 2. 성인지예산사업 총괄표	<div>부처명</div> 1. 성평등목표 2. 성인지예산사업 총괄표
사업설명 자료양식	2. 사업설명자료 <div>000사업</div>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10년 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정책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지난 3년간 추진실적 및 성과 <input type="checkbox"/> 세부내역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3. 사업설명자료 <div>000사업</div>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10년 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정책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성평등목표분야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성별 수혜분석 o 사업대상자 o 사업수혜자 o 예산 현황	3. 사업설명자료 <div>000사업</div>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11년 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정책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성평등목표분야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성별 수혜분석 o 사업대상자 o 사업수혜자 o 예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11년 성과목표	3. 사업설명자료 <div>000사업</div>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13년 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input type="checkbox"/> 정책대상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성평등목표 <input type="checkbox"/> 성평등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성별 수혜분석 o 사업대상자 o 사업수혜자 o 예산 현황 <input type="checkbox"/> 예산및사업반영계획 <input type="checkbox"/> '13년 성과목표 o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

자료 : 각 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부)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
성하여 작성함. 조선주 외(2012)에서 재인용함.

〈표 Ⅳ-2〉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현황

(단위: 개)

구 분	2010년도 예산서	2010년도 결산서	2011년도 예산서	2011년도 결산서	2012년도 예산서	2013년도 예산서
기관 수 합계	29	29	34	34	34	34
사업 수 합계	195	195	245	241	254	275
국회	-	-	1	1	1	1
대법원	-	-	-	-	2	2
기획재정부	1	1	2	2	3	1
교육과학기술부	19	19	17	16	14	14
외교통상부	1	1	8	8	10	12
통일부	2	2	2	2	2	3
법무부	5	5	7	7	12	13
국방부	3	3	3	3	3	5
행정안전부	10	10	9	9	10	9
문화체육관광부	14	14	23	23	23	24
농림수산업부	22	22	27	26	22	26
지식경제부	4	4	3	3	3	4
보건복지부	27	21	33	33	34	28
환경부	5	5	7	7	7	7
고용노동부	11	11	22	23	26	33
여성가족부	28	34	29	29	31	38
국토해양부	7	7	6	6	5	5
법제처	1	1	1	1	1	-
국가인권위원회	2	2	2	2	2	2
공정거래위원회	-	-	2	1	-	-
금융위원회	1	1	1	1	1	1
국민권익위원회	-	-	1	1	1	1
국세청	2	2	1	1	1	1
조달청	1	1	1	1	1	2
통계청	1	1	3	1	1	1

구 분	2010년도 예산서	2010년도 결산서	2011년도 예산서	2011년도 결산서	2012년도 예산서	2013년도 예산서
경찰청	-	-	1	1	2	3
문화재청	1	1	3	3	3	3
농촌진흥청	11	11	10	10	11	11
산림청	2	2	1	1	4	4
중소기업청	8	8	10	10	9	9
특허청	3	3	3	3	3	3
식품의약품안전청	-	-	1	1	2	2
기상청	1	1	-	-	-	-
해양경찰청	1	1	3	3	1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1	1	1	-
국가보훈처	-	-	1	1	2	4
관세청	-	-	-	-	-	1
방송통신위원회	-	-	-	-	-	1

- 주 : 1) 사업 수는 세부사업 수 기준이며, 기관명은 2013년도 현재 기관명을 기준으로
 2) 성인지 대상사업의 범위가 2011년도에 변경되면서, 2010년도는 예산 사업만을, 2011년도부터는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을 합한 수입
 3) 동일연도의 예·결산서 사업 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도 예산서와 결산서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 수에 차이가 있다. 이는 2010년 3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가족, 청소년, 아동 업무 등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예산서 상 보건복지부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출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증보험료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보조)’,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아동청소년 정보화’ 사업이 결산서상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작성되었다.
- 다음으로 2011년의 경우 예산서의 총 사업 수는 245개이나, 결산서의 총 사업 수는 241개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이 2개 사업에 대해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출연-대학생국내외봉사활동지원’사업이 외교통상부로 이관,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2개 사업이 예산서에서는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한국소비자원출연’의 내역사업으로 결산서에서는 1개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식품산업및식문화교육-식품산업전문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예산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성하였으나, 이후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결산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였다.

2. 기관 및 사업 평가기준(안) 개발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평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실제 평가기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평가는 평가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평가의 목적은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대상으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별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내용을 각 기관에 환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는 그 작성양식이 다르므로 예산서의 평가기준과 결산서의 평가기준은 다르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해마다 작성양식이 조금씩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의 예산서(『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표 IV-3>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을 보면, 각 기관의 작성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의 기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를 작성하는 내용이다. 기관의 성평등 목표는 기관에서 작성한 사업들의 성평등 목표와 기관 고유의 성평등 목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며,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는 각 사업별 예산현황 및 증감현황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항목이다.

다른 하나는 각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이다. 사업별 설명자료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사업이 내역사업일 경우에는 내역사업 단위로 작성한다. 작성내용은 사업명 및 예산안 등의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성평등 목표 및 성평등 기대효과,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예산현황의 성별수혜분석 현황, 성과목표 및 산출근거를 중심으로 한다. 기관의 성평등 목표 및 사업총괄표는 해당 기관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작성하며, 사업별 설명자료는 사업담당자가 작성한다. 작성담당자와 작성내용이 모두 다른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을 개발 시 기관의 작성내용을 평가하는 평가기준과 사업의 작성내용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표 IV-3〉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부 처 명																																												
<p>1. 성 평 등 목 표</p> <p style="margin-left: 40px;"><input type="checkbox"/>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술</p>																																												
<p>2.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백만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회 계</th> <th style="width: 20%;">세부사업명</th> <th style="width: 10%;">‘12년 예산(A)</th> <th style="width: 10%;">‘13년 예산안(B)</th> <th style="width: 10%;">증감 (B-A)</th> <th style="width: 10%;">증감률 (%)</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left;">일반회계</td> <td>① 0000</td> <td>xxx</td> <td></td> <td>xxx</td> <td></td> </tr> <tr> <td>－ △△△</td> <td>xxx</td> <td></td> <td>xxx</td> <td></td> </tr> <tr> <td>－ ○○○</td> <td>xxx</td> <td></td> <td>xxx</td> <td></td> </tr> <tr> <td>② □□□</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00특별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총 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회 계	세부사업명	‘12년 예산(A)	‘13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① 0000	xxx		xxx		－ △△△	xxx		xxx		－ ○○○	xxx		xxx		② □□□					00특별회계						총 계					
회 계	세부사업명	‘12년 예산(A)	‘13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① 0000	xxx		xxx																																								
	－ △△△	xxx		xxx																																								
	－ ○○○	xxx		xxx																																								
	② □□□																																											
00특별회계																																												
총 계																																												
<p>3. 사업별 설명자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1. ○ ○ 사 업 (세부사업명)</p> <p>- X X (내역사업명) -</p> </div> <p><input type="checkbox"/> 사업명 : ** 사업(00회계)</p> <p><input type="checkbox"/> 2013년 예산안</p> <p><input type="checkbox"/> 정책대상</p> <p><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p> <p><input type="checkbox"/> 성평등 목표</p> <p><input type="checkbox"/> 성평등 기대효과</p>																																												

☐ 성별 수혜 분석

○ 사업대상자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 통계출처:

○ 사업수혜자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수혜자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 통계출처:

○ 예산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명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 통계출처:

☐ 2013년 성과목표

성과목표(지표)	'11년 실적	'12년 추정치	'13년 목표치

○ 산출근거

작성양식의 차이 외에도 기관평가와 사업평가는 평가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기관평가는 기관의 성평등 개선 추진노력 및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사업평가¹³⁾는 각 사업별 예산서가 얼마나 잘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다. 이 때, 단순히 사업평가의 결과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기관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지나치게 형식적인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므로(이윤식 외, 2005), 기관평가와 사업평가는 부문을 다르게 구성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성인지예산서의 평가기준을 도출하면 <표 IV-4>, <표 IV-5>와 같다. 평가기준은 크게 기관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구성되며, 기관부문의 경우 성평등 목표, 예산증감률, 사업 수, 예산규모를 평가지표로 한다. 반면 사업부문의 경우 작성충실도, 성평등 목표, 성별구분통계,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한다.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사업평가의 점수는 사업부문 점수를 토대로 산출하며, 기관평가의 점수는 해당 기관의 사업평가 점수의 평균과 기관부문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한다.¹⁴⁾ 이광희(2012)는 이처럼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관의 역량 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한국의 독자적인 평가 패러다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평가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의 성평등 목표는 세 가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첫째는 해당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부처의 존립 목적, 부처의 특성 및 타부처와의 차별점 등을 고려)를 고려한 성평등 목표 인지의 여부, 둘째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셋째는 사업별 성평등 목표를 모두 포괄하는 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관한 점수

13) 사업평가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광희, 2012; Wholey, 1999; Davies, 1999; Perrin 1999).

1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는 기관부문과 사업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평가모형을 만든 후 사업평가에는 ‘평가보고서’ 항목만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기관평가에는 모든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 산출된다. 다음 평가지표는 예산의 증감률이다. <표 IV-3>의 작성양식을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총괄표를 기준으로 '12년 예산과 '12년 예산의 증감률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와 예산규모 지표가 있다. 사업 수와 예산규모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과의 자문회의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던 지표이다. 그러나 기관이 전체 사업 중 얼마나 많은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예산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사업에 포함하였는가는 기관의 성평등 추진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대상사업이 미리 선정되어 통보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작성에 있어 강제력이 없는 한 이는 기관의 작성노력 및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표를 평가기준에 포함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 수 대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수, 전체 예산규모 대비 성인지예산의 규모를 비율화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외 기관의 작성교육 참석 여부, 컨설팅 참여 여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이 평가지표로 제시되었으나 지표의 변별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최종 평가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사업부문의 평가지표는 작성충실도, 성평등 목표, 성별구분통계,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로 구성된다. 작성충실도는 예산서의 전반적인 작성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표 IV-3>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에 제시된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성과목표 산출근거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성평등 목표는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도출하는데, 하나는 사업의 목적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작성된 성평등 목표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양성평등 정책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이다. 성별구분통계 지표의 경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의 성별구분통계가 적절한지와 통계출처가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성평등 효과 지표는 성별수혜분석 항목을 기준으로 성별격차가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성과목표는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지표이다. 성과목표의 적절성 여부는 성과목표가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는지, 그리고 작성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성평등이 제고되는지

를 판단하여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목표치의 적절성 여부 역시 전년도 실적치와 작성년도 추정치 및 산출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표 IV-4〉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 기관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기관 부문	성평등 목표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 및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포괄 정도
	예산증감률	기관 전체 사업의 예산증감률 정도
	사업 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 비율
	예산규모	전체 예산규모 대비 부처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규모 비율

〈표 IV-5〉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 : 사업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사업 부문	작성충실도		작성내용 전반의 누락정도
	성평등 목표		사업 목적, 선정사유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부합 정도
	성별구분통계		관련 성별구분통계 사용여부 및 통계현황에 대한 근거자 료 제시
	성평등 효과		예산편성결과가 양성평등에 기여하는가 여부
	성과 목표	성과목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목표치 적절성	산출근거의 내용을 토대로 목표치의 적절성 여부

평가배점을 살펴보면, 기관부문의 성평등 목표는 a항목(해당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성평등 목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b항목(여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c항목(사업별 성평등 목표 모두를 포괄하는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각에 대하여 3점을 배분, 성평등 목표 지표에 총 9점이 배분되었다. 배점방법은 3

단계(아니오,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예산증감률 지표는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에 작성된 예산증감률을 토대로 5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업 수 및 예산규모는 전체 사업 수 및 전체 예산규모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배점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부문의 작성충실도 지표는 작성양식의 각 항목당 1점씩을 배분하여 총 34점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성평등 목표는 기관부문과 마찬가지로 a항목(사업의 목적이 반영되었는지 여부)과 b항목(작성된 성평등 목표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수록된 양성평등정책을 반영하는지 여부)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5점이 부여되었으며, 배점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아니오’의 경우 1점, ‘어느 정도’의 경우 3점, ‘상당한 정도’의 경우 5점을 배분하였다.

성별구분통계지표는 a항목(성별구분통계의 적절성) 및 b항목(통계출처의 적절성)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는데, a항목의 점수는 사업대상자 통계의 적절성 3점과 사업수혜자 통계의 적절성 3점을 합산하여 6점을 배분하였다. 이 때, 통계를 미작성했을 경우에는 0점, ‘아니오’의 경우 1점, ‘어느 정도’의 경우 2점, ‘상당한 정도’의 경우 3점이 부여되었다. b항목은 통계출처를 미작성했을 경우 0점, 작성은 하였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2점,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를 사용했을 경우 4점을 배분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성평등 효과 지표는 전년대비 성불평등이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배분하였다. 성별격차가 증가한 경우 1점, 성별격차가 동일한 경우 3점, 성별격차가 감소된 경우가 5점이다.

마지막으로 성과목표 지표는 a항목(성과목표 적절성)과 b항목(목표치 적절성)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는데, a항목의 경우 성과목표가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0~3점이 배분되고, 작성된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양성평등이 제고된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0~3점이 배분되었다. 미작성의 경우 0점, ‘아니오’의 경우 1점, ‘어느 정도’의 경우 2점, ‘상당한 정도’의 경우 3점이 배분되어, a항목의 총 점수는 6점이 배분되었다. b항목의 경우 목표치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점수가 배점되는데 미작성의 경우 0점, ‘아니오’의 경우 1점, ‘어느 정도’의 경우 2점, ‘상당한 정도’의

경우 3점이 배분되어 최고 점수는 3점으로 배분되었다.

〈표 IV-6〉 성인지예산서 평가배점 : 기관

(단위: 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예산증감	'12년 대비 '13년 예산 증감 여부	5

〈표 IV-7〉 성인지예산서 평가배점 : 사업

(단위: 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34
	성평등 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성평등 효과	'12년 대비 성불평등 감소 여부	5
	성과목표	2항목에 대한 합계	9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성인지결산서의 평가기준은 전체적인 틀은 성인지예산서의 평가기준과 유사하나, 작성양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성인지예산서의 평가기준과는 일부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8>를 보면,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양식이 제시되어 있다. 성인지예산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관의 재정담당관이 작성하는 개요 부분과 사업담당자가 작성하는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구성된다. 개요 부분에서는 성평등 목표와 성평등 목표 추진결과, 성인지결산 사업 총괄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별 집행내역에서는 사업명, 정책대상 등 사업의 일반적인 내용 및 성평등 목표·집행실적·성평등 효과분석·성과목표 달성현황·평가의 항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관의 성평등 목표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성평등 목표 추진결과는 해당 기관의 사업별 집행실적을 성평등 목표 별로 종합하여 작성하면 된다. 성인지결산 사업 총괄표는 사업별 예산집행 결과와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항목이다. 사업별 집행내 역의 사업목적, 정책대상, 성평등 목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 하며, 집행실적의 예산의 집행실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성평등 효과분 석 및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지출액 및 실적치를 중심으로 작성하며, 평가항 목은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표 IV-8〉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양식

부 처 명			
(1) 개요			
1. 성 평등 목표			
<input type="checkbox"/> 여성인력활용 <input type="checkbox"/> 여성권익보호 <input type="checkbox"/>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2. 성 평등 목표 추진 결과			
<input type="checkbox"/> 여성인력활용 <input type="checkbox"/> 여성권익보호 <input type="checkbox"/>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3. 성인지 결산 사업 총괄표			
<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명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일반회계	① 0000	xxx	xxx
	- △△△	xxx	xxx
	- ○○○	xxx	xxx
	② □□□		
○○특별회계			
합 계			
<input type="checkbox"/> '1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개)	목표 달성(개)	목표 미달(개)	

(2) 사업별 집행내역

○ ○ 사 업 (세부사업명) - X X (내역사업명) -

☐ 사업명 : ** 사업(○○회계)

☐ 사업목적

☐ 정책대상

☐ 성 평 등 목표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세출 예산액(A)	예산결정후 증감액(B)	세출예산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B) 내역 :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지출액) 분석

- 집행률 : xx.x %

- 집행실적 분석 :

☐ 성 평 등 효과분석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전체	여성 (비율)	남성(비율)
09년	세출예산현액			
	사업대상자			
	지출액			
	수혜자			
10년	세출예산현액			
	사업대상자			
	지출액			
	수혜자			
11년	세출예산현액			
	사업대상자			
	지출액			
	수혜자			

* 통계출처:

☐ '11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11년 성과목표(지표)	'11년 목표치	'11년 실적치

* 통계출처:

☐ 평 가

이러한 작성양식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관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성과 및 실적이 포괄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안)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표 IV-9>, <표 IV-10>과 같다.

기관부문의 평가지표를 보면, 성평등 목표, 사업 수, 결산규모, 성과목표 달성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 목표의 경우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부처의 존립목적, 부처의 특성 및 타부처와의 차별점 등)를 고려하여 성평등 목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정부의 양성평등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별 성평등 목표를 모두 포괄하는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점수가 산출된다. 또한 사업 수 및 결산규모 역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판단하여 평가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사업 수 비율, 전체 결산규모 대비 부처의 결산규모 비율을 산출하여 점수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기관의 각 사업들이 제시한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반영하여 달성 및 미달성의 여부에 따라 점수를 도출하였다.

사업부문의 평가지표는 작성충실도, 성평등 목표, 성별구분통계, 평가분석, 성과목표 달성현황으로 구성된다. 작성충실도 역시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로 <표 IV-8>의 작성양식에 기재된 성평등 목표,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성과목표 달성현황, 평가 항목의 전반적인 작성 정도 및 정보 누락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성평등 목표는 사업의 목적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작성된 성평등 목표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성별구분통계는 예산서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별구분통계의 적절성 및 통계출처의 적절성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였다. 평가항목의 경우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서 새롭게 도입된 항목으로, 제시된 통계에 대한 설명과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잘한 점과 미흡한 점,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잘 작성되고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제도의 성과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으므로, 평가분석의 배점은 비교적 높게 설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별수혜격차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산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에 의존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성과목표의 적절성은 예산서와 마찬가지로 성과목표가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는지 여부와 작성된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성평등이 제고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반면,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목표치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와 백분율로 환산한 달성률을 함께 사용하였다.

〈표 IV-9〉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 기관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 및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포괄 정도
	사업 수	전체 사업 수 대비 기관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 수 비율
	결산규모	전체 결산규모 대비 부처의 성인지결산 대상사업 규모 비율
	성과목표 달성현황	전체 성과목표 대비 목표달성 비율

〈표 IV-10〉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 : 사업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 내용
사업 부문	작성충실도		작성 내용 전반의 누락정도
	성평등 목표		사업 목적, 선정사유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부합 정도
	성별구분통계		관련 성별구분통계 사용여부 및 통계현황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평가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항목에 대한 적절성 충족 여부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성과목표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정도에 따라 점수부여
		성과목표 달성률	목표치 산출의 타당성 정도 및 목표치 달성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가배점을 살펴보면, 기관부문의 성평등 목표는 a항목(해당 기관 고유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성평등 목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b항목(여성정책기본계획에 있는 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c항목(사업별 성평등 목표 모두를 포괄하는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였는지 여부) 각각에 대하여 3점을 배분, 성평등 목표 지표에 총 9점이 배분되었다. 배점방법은 3단계(아니오,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성과목표 달성현황 지표는 기관의 전체 성과목표(지표) 수와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비교하여 목표치를 달성한 성과목표(지표) 수를 계산하여 $[(\text{달성 성과목표수} \times 100) / \text{전체 성과목표}]$ 의 산식을 토대로 점수를 도출하여 그 값을 사용하였다.

사업 수 및 결산규모는 전체 사업 수 및 전체 결산규모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배점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부문의 작성충실도 지표는 작성양식의 각 항목당 1점씩을 배분하여 총 44점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성평등 목표는 기관부문과 마찬가지로 a항목(사업의 목적이 반영되었는지 여부)과 b항목(작성된 성평등 목표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수록된 양성평등정책을 반영하는지 여

부)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5점이 부여되었으며, 배점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아니오’의 경우 1점, ‘어느 정도’의 경우 3점, ‘상당한 정도’의 경우 5점을 배분하였다.

성별구분통계 지표는 a항목(성별구분통계의 적절성) 및 b항목(통계출처의 적절성)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는데, a항목의 점수는 사업대상자 통계의 적절성 3점과 사업수혜자 통계의 적절성 3점을 합산하여 6점을 배분하였다. 이 때, 통계를 미작성했을 경우에는 0점, ‘아니오’의 경우 1점, ‘어느 정도’의 경우 2점, ‘상당한 정도’의 경우 3점이 부여되었다. b항목은 통계출처를 미작성했을 경우 0점, 작성은 하였으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2점, 공식력있는 기관의 통계를 사용했을 경우 4점을 배분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지표는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a항목(성별수혜격차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여부), b항목(구체적인 원인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c항목(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여부) 각각에 대하여 3점씩을 배분하여 총 9점을 배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목표 달성현황 지표는 a항목(성과목표 적절성)과 b항목(성과목표 달성현황)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는데, a항목의 경우 성과목표가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0~3점이 배분되고, 작성된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양성평등이 제고된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0~3점이 배분되었다. 미작성의 경우 0점, ‘아니오’의 경우 1점, ‘어느 정도’의 경우 2점, ‘상당한 정도’의 경우 3점이 배분되어, a항목의 총 점수는 6점이 배분되었다. b항목의 경우 목표치의 적절성 및 달성률을 토대로 아래의 표와 같이 배점을 정하여 총 15점을 배분하였다.

〈표 IV-11〉 성인지결산서 평가배점 : 기관

(단위: 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성과목표 달성현황	(달성수*100)/성과목표(지표) 수	100

〈표 IV-12〉 성인지결산서 평가배점 : 사업

(단위: 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44
	성평등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평가	3항목에 대한 합계	9
	성과목표 달성현황	2항목에 대한 합계	21

〈표 IV-13〉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달성현황 배점 방법

(단위: 점)

달성률 목표치	120%이상	119~100%	99~80%	80%미만	미기재
우수	15	14	13	12	2
보통	11	10	9	8	2
미흡	7	6	5	4	2
미기재	3	3	3	3	0

3. 기관 및 사업 평가결과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의 총체적 작성 수준을 집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앞 절에서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개발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성인지예산서의 평가대상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275개 사업¹⁵⁾(예산사업 224개, 기금사업 51개 사업)이다.

반면 성인지결산서의 평가대상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241개 사업¹⁶⁾(예산사업 197개 사업, 기금사업 44개 사업)이다.

평가결과는 기관평가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등급을 반영하여 4등급화하였다. 실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는 평가점수에 따라 5등급(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 미만))으로 구분되나,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보통 이하의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의욕 및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우수등급의 경우 세분화할수록 작성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으로 나누었다.¹⁷⁾ 사업평가의 결과는 등급화하는 대신 평가점수에 따라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작성내용을 제시하였

-
- 15) 성인지예산서 평가대상의 구체적인 사업은 국회의 1개 사업, 대법원의 2개 사업, 기획재정부의 1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14개 사업, 외교통상부의 12개 사업, 통일부의 3개 사업, 법무부의 13개 사업, 국방부의 5개 사업, 행정안전부의 9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4개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26개 사업, 지식경제부의 4개 사업, 보건복지부의 28개 사업, 환경부의 7개 사업, 고용노동부의 33개 사업, 여성가족부의 38개 사업, 국토해양부의 5개 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2개 사업, 금융위원회의 1개 사업, 국민권익위원회의 1개 사업, 국세청의 1개 사업, 조달청의 2개 사업, 통계청의 1개 사업, 경찰청의 3개 사업, 문화재청의 3개 사업, 농촌진흥청의 11개 사업, 산림청의 4개 사업, 중소기업청의 9개 사업, 특허청의 3개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개 사업, 해양경찰청의 1개 사업, 국가보훈처의 4개 사업, 관세청의 1개 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1개 사업이다.
- 16) 성인지결산서의 평가 대상사업은 구체적으로 국회의 1개 사업, 기획재정부의 2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16개 사업, 외교통상부의 8개 사업, 통일부의 2개 사업, 법무부의 7개 사업, 국방부의 3개 사업, 행정안전부의 9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3개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26개 사업, 지식경제부의 3개 사업, 보건복지부의 33개 사업, 환경부의 7개 사업, 고용노동부의 23개 사업, 여성가족부의 29개 사업, 국토해양부의 6개 사업, 법제처의 1개 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2개 사업,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의 1개 사업, 문화재청의 3개 사업, 농촌진흥청의 10개 사업, 산림청의 1개 사업, 중소기업청의 10개 사업, 특허청의 3개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개 사업, 해양경찰청의 3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개 사업, 국가보훈처의 1개 사업이다.
- 17) ‘정부업무평가’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유형(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결과

성인지예산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표 IV-14>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기관부문보다 사업부문의 점수격차(최고점수-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관부문보다 사업부문의 작성내용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성평등 목표의 경우 평가점수가 부문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성 난이도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부문의 경우 작성충실도의 점수격차는 0.7로 나타나 크게 정보가 누락된 항목은 없다고 예상되는 반면 성별구분통계 및 성과목표의 격차는 3.3~3.4점으로 분석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작성 어려움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 작성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때에는 성별구분통계 및 성과목표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V-14〉 성인지예산서의 부문별·항목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평균	격차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6.7	2.3
	예산증감	'12년 대비 '13년 예산 증감 여부	5	3.5	1.5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34	33.3	0.7
	성평등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7.6	2.4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6.6	3.4
	성평등 효과	'12년 대비 성불평등 감소 여부	5	2.7	2.3
	성과목표	2항목에 대한 합계	9	5.7	3.3

1) 기관 평가결과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보면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중앙행정

기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34개 대상기관 중 90점 이상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였으며,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우수’ 등급인 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개 기관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급은 ‘보통’ 등급으로 전체 기관 중 28개 기관이 이 등급에 속해 82.4%를 차지하였다. 반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 기관으로, ‘미흡’ 등급에 비해 ‘우수’ 및 ‘매우 우수’ 등급의 기관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관을 대상사업 수를 기준으로 나열해보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의 순이다. 한편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나열해 보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의 순이다.

〈표 Ⅳ-15〉 성인지예산서 기관 평가결과

등급	기관수(%)	기관명
매우 우수(90점 이상)	3개(8.8%)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우수 (80~89점)	2개(5.9%)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통 (60~79점)	28개(82.4%)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국회 대법원
		경찰청 통일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관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지식경제부

등급	기관수(%)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외교통상부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미흡 (50~59점)	1개(2.9%)	산림청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5개 기관의 경우, 비교적 많은 대상사업 수와 큰 예산규모를 보인 기관들이다. 따라서 예상대로 기관부문의 사업 수와 예산규모 지표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나 중소기업청의 경우 사업 수나 예산규모에 비해 평가결과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사업 수와 예산규모가 평가결과를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지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미흡’ 등급을 받은 산림청의 경우, ‘보통’ 등급의 기관들과 평가점수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목표치 설정에 있어 ’12년 추정치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 평가결과

다음으로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우수사례는 <표 IV-16>과 같다. 20개의 우수사례 중에서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8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여성관련 정책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부처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외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4개 사업, 농촌진흥청이 2개, 고용노동부가 2개,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이 각각 1개씩이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Ⅳ-16〉 성인지예산서 작성 우수사례 : 점수 평균 상위 20위

번호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1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 되는 사업임 ◦ 사업대상자 중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여성 중증 장애인에게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대상자의 여성비율 대비 사업수혜자의 여성비율이 낮음을 고려해, 성과목표를 ‘활동지원수급자 중 여성장애인 비율’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있음. 또한 목표치를 성과 목표 실적치의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향설정 하고 있어 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됨
2	노인일자리운영 -노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의 노인을 정책대상으로 하며,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 취업알선·상담을 통해 노인의 사회활동, 건강 증진, 소득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된 사업임 ◦ 이러한 사업목적을 바탕으로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건강관리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주요 성평등 목표로 함 ◦ 이러한 성평등 목표에 연계되는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산출근거 역시 적절히 제시되고 있음
3	어린이집기능보강 -국공립확충-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보육시설 접근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함에 성평등 목표가 있음 ◦ 사업목적 및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가 적절히 연계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시계열적 추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고 있음 ◦ 기존의 성인지예산서에는 영유아의 성별인원수와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성과목표가 미기재되었으나, 그에 대한 대체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지가 엿보임
4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분야 특성화대학원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성평등 목표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반영하여 여성인력활용으로 바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미달성하였음 ◦ 그러나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사업의 특성, 목표치의 잘못된 설정, 예상치 못한 변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개선사항 역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업담당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번호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5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친화기업인증-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의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함. 또한 그 과정에서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강화 및 여성인력 활용이 성평등 목표로 제시되고 있음 사업의 특성에 맞게 기업을 단위로 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 수혜자의 통계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목표치의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목표치를 전년 대비 20% 상향설정함으로써 성평등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6	아이돌봄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봄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07년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사업목적 및 성평등 목표에 맞는 적절한 성평등 기대 효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 또한 산출근거 역시 시계열적 추이를 반영하여 적절히 제시하고 있음
7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아동성폭력전문가참여-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의 경찰 조사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및 분석결과를 수사 및 재판과정의 증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며 성평등 목표임 사업의 내용과 연계되는 적절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사업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었음
8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농업인대학운영-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농업인의 농업전문기술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사업의 목적임. 1997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성평등 목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 성별구분통계 역시 적절히 제시되었으며, 산출근거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9	자원활용기술보급 (보조) -농촌교육농장육성-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자격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를 체계적으로 육성, 청소년에게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업기회의 폭이 좁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촌교육농장의 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취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따라서 여성경제인 육성 등의 성평등 목표는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성평등 목표를 반영하는 성과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산출근거 역시 구체적인 측정산식을 제시하며 적절히 도출되었음

번호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대 학(원)의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을 정책대상으로 200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임. 성평등목표는 여성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성평등 기대효과는 비전통분야의 여성진출을 확대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가 적절히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 성과목표는 단기간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장기간의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지표가 함께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적절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있음
11	기타정책사업 -각군어린이집운영 보조금지원-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 전 자녀를 둔 군인, 군무원,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군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성평등 목표임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산출근거 역시 적절히 작성되었음
12	중소기업훈련지원 -중소기업핵심직 무능력향상 지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훈련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여성인력에게 양질의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의 목적과 내용, 성평등 목표가 적절히 연계되고 있음 또한 성평등 목표를 반영하는 성과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사업의 여건이 반영된 현실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되고 있음
13	직업능력개발지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공공훈련기관에서 경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그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 사업의 성평등 목표임 성평등 목표를 반영하는 적절한 성과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성평등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14	여성장애인지원사업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서비스 및 출산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이 사업의 목적임. 사업의 목적과 연계되는 성평등 목표와 성평등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성별구분통계를 교육지원 및 출산비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역시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실적치 및 추정치,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작성 노력을 엿볼 수 있음
15	성인지정책 분석평가운영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정책 및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번호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성평등 목표 및 성평등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업수혜자의 통계현황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교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는 만족도 지표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목표치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설정하고 있음
16	여성단체공동협력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민간단체(NGO) 간의 긴밀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 ◦ 사업수혜자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해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는 만족도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적절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1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확충 및 개선을 사업수단으로 하여, 한부모가족의 지원강화를 추구함. 그 과정에서 여성의 복지 요구를 충족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성평등 목표임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예산을 성별로 분리하여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각각에 대해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성과지표는 만족도 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18	성매매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961년 이후 계속된 사업임.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및 왜곡된 성의식 개선 유도로 사업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의 수혜자 및 예산현황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목표는 주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2개의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각각의 성과목표에 대한 산출근거를 최근의 추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산식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음
19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 활안정 및 기념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임. 사업목적과 적절히 연계되는 성평등 목표와 성평등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성과목표를 만족도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측정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음. 또한 최근 4년간의 만족도 추이 및 외교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20	성매매방지중앙지원 센터운영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고자 함. 그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성매매방지 홍보를 실시하여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고자 하

번호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p>는 것이 본 사업에서 기대하는 성평등 기대효과임</p> <p>◦ 이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목표 역시 성과지표 및 결과지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적절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p>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다음으로 성인지결산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표 IV-17>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지예산서의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성평등 목표의 평가 점수는 부문에 관계없이 유사한 평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평균점수가 성인지결산서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 2013년도부터 서술식의 형태로 작성양식이 변경되어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작성에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작성충실도 지표의 경우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높은 점수에 비해 결산서의 평가결과는 낮은 점수를 보여 예산서에 비해 결산서의 작성내용이 더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교적 높은 점수격차(최고점수-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는 평가항목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성과목표 달성현황 역시 높은 점수격차를 보이고 있어 성인지예산제도 대상사업들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비교적 낮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IV-17> 성인지결산서의 부문별·항목별 평가결과

(단위: 점)

부문	평가지표	지표설명	최고점수	평균	격차
기관부문	성평등 목표	a, b, c 항목 점수 합계	9	7.0	2.0
	성과목표 달성현황	(달성수*100)/성과목표(지표) 수	100	69.4	30.6
사업부문	작성충실도	5항목에 대한 합계	44	40.5	3.5
	성평등 목표	a, b 항목 점수 합계	10	7.9	2.1
	성별구분통계	2항목에 대한 합계	10	7.6	2.4
	평가	3항목에 대한 합계	9	5.7	3.3
	성과목표 달성현황	2항목에 대한 합계	21	12.3	8.7

1) 기관 평가결과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34개 기관 중 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서의 평가결과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전체 34개 기관 중 5개 기관으로 성인지결산서의 우수 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미흡’ 등급으로 제시된 기관이 1개 기관인데 반해, 성인지결산서의 경우 7개 기관이나 분포되어 있어 기관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업 수 및 결산규모가 평가지표로 포함되었지만, 사업 수 및 결산규모에 있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통계청, 경찰청 등이 ‘우수’ 등급에 속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지표가 우려했던 만큼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인지예산서의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우수’ 등급을 받아 상기 5개 기관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높은 의지를 보이는 우수 기관으로 판단된다.

〈표 IV-18〉 성인지결산서 기관 평가결과

등급	기관수(%)	기관명
매우 우수 (90점 이상)	3개(8.8%)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우수 (80~89점)	5개(14.7%)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계청 경찰청
보통 (60~79점)	19개(55.9%)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특허청 국회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문화재청 환경부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급	기관수(%)	기관명
미흡 (50~59점)	7개(20.6%)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지식경제부 산림청 통일부 국세청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보훈처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 사업 평가결과

성인지결산서의 사업 평가결과, 20개의 우수사례 중에서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전체 사업 평가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가족부의 모든 사업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기관의 업무 특성이 사업 평가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 3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 1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이 1개 포함되어 있어 성인지예산서의 사업 평가결과에 비해 부처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앞의 부문별·항목별 평가결과와 연계해 보면, 평가항목을 포함한 성인지결산서의 작성내용이 성인지예산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따라서 성평등 의식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가족부의 우수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Ⅳ-19〉 성인지결산서 작성 우수사례 : 점수 평균 상위 20위

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1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친화기업인증-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가정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 목적임 ◦ 따라서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

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p>화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를 가족친화기업 인증기관, 가족친화지수 측정기관, 가족친화 직장교육 참여자수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또한 성과목표 역시 사업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목표치 및 실적치를 기재하고 있으며, 세 성과지표의 평균 목표 달성률은 209.8%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진실적에 대해 사회적 인식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나 가족친화경영대상 수여, 지하철 광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산 등의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음
2	모성보호육아지원 -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성평등 목표가 있음 ◦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지출계획액을 변경하여 예산을 증액 집행하였음.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3	폭력피해이주 여성지원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시설연계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전년대비 현황분석을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사업의 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시설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방안 외에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관리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음 ◦ 2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단기적인 측면의 성과지표이며, 다른 하나는 사업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의 성과지표임. 다양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다각적인 성과관리를 시도하고 있음 ◦ 또한 현황분석 역시 최근 3개년의 통계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원인 및 개선사항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5	여성장애인사회 참여확대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수요자 중심의 역량강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성과목표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성과목표는 사업의 단기적인 성과 및 장기적인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성과지표임. 또한 목표치를 제시함에 있어 그에 대한 산출근거를 측정산식을 활용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시설확충 및 개선, 차량 구매 등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6	성매매방지중앙 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목표치를 1.6% 초과달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홍보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 사업들이 단순히 홍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원인을 국민들의 인권 침해성,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서 찾고, 홍보를 통한 성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함.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물의 명칭 등을 제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7	다문화가족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정착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데 성평등 목표가 있음 ◦ 사업의 특성 상 수혜자 및 지출액의 성별구분통계를 제시할 수 없으나, 그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성과목표를 단순히 여성수혜비율로 제시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단위를 가족단위로 설정하여 지표를 제시하였음. 또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8	성범죄청소년 치료, 재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 재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과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성폭력 가해청소년에게는 인지행동치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사업목적을 잘 반영하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개선사항 역시 적절히 제시되어 있음
9	국내외연계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전문인력의 기술역량 고도화 추진과 산학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콘텐츠 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성평등 목표가 있음 ◦ 사업의 특성 및 제도적인 여건에 비추어 현황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적절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

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10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성중립적 영역으로 취급되었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에 사업의 목적이 있음. 이로 인한 성평등정책의 추진기반강화가 사업의 성평등 목표임 ◦ 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복수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관의 유형을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있음. 또한 현황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의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한부모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상별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데 성평등 목표가 있음 ◦ 법,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결과지표(만족도)의 미달성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평등 효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시도하였음. 개선사항 역시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12	의과학자육성지원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학자 과정을 이수하는 전문대학원생을 신진의과학자로 양성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데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성과목표의 목표치는 미달성하였으나, 그에 대한 현황 및 원인 분석이 매우 구체적이며 최근 4년간의 시계열 추이를 함께 살펴 보고 있음 ◦ 또한 개선사항 역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13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근로자, 신규실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대부해줌으로써 여성인력의 활용기반 내실화를 추구함 ◦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이 가능해짐
14	기술·기능인력양성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수급자의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재취업 촉진에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성과목표를 여성수혜비율로 설정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성과관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구체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성별구분통계를 분석에 사용하여 분석의 질을 제고하였음
15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및 홍보 등의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궁극적으로 평등문화를

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명)	주요 평가 내용
		<p>확산하고 조성하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개선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16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학비를 부담함으로써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 그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성평등 목표로, 설정된 성과목표는 이러한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 ◦ 원인 및 방안을 사업의 여건 및 환경에 비추어 적절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17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가정의 청소년에게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 ◦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그 수치에 기반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있음. 또한 현황을 통해 성평등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인용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있음 ◦ 개선사항 역시 일반적인 제안이 아닌 계획 및 법 개선 등의 현실적인 제안을 도출하고 있음
18	성매매피해자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음. 그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성과목표는 적절한 복수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인용하여 평가분석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요구됨
19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성평등 목표임. 성과목표는 이와 연계하여 적절히 설정된 결과지표임 ◦ 적절한 평가분석이 수행되었으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됨
20	다문화가족언어 및 교육지원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생활의 정착을 지원함 ◦ 성과지표는 단기적인 측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황 및 원인분석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평가분석을 시도하였음

V

결론 및 정책과제

정부는 2010회계연도부터 국가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 법정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2012년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0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인지 예·결산제도에 관한 개념 정립, 제도에 관한 공감, 중앙행정기관의 참여, 성별구분통계의 구축,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사업들의 예산 증액, 성별수혜격차 감소 등과 같은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추진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을 통해 현재의 성불평등 실태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성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선포제이다. 김영옥 외(2010) 역시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작성된 예·결산서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해 보았다. 우선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대상사업의 작성 실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사업 내적요인과 사업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그 요인들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선정기준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적용·검토하였다. 평가기준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연구 결과 실제 적용 가능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이 도출되었으며, 유용한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방식은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평가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방식 등에 따라 점수가 역전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지 얼마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성숙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그 기준을 적용해 본 시범연구(pilot study)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제도의 도입배경, 제도화 과정, 방법론과 도구개발 등에 중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관련 분야의 시론적 연구로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그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구의 제도화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 추진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이다. 기획재정부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의 주무기관이며,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상의 협조기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에 의해 선정되며 각 기관은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 관해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보니,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들이 선정되는 등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바람직한 선정 구조는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지만, 유사 제도들에 비추어 볼 때 자율선정 및 평가에만 의존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제도 및 성평등 이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업무 구

조는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추진 동력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¹⁸⁾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김진영(2010; Hewit 2002)은 개도국 정부를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도입과정에서 주요 핵심관계자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담당기관들이 역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여성 관련 기관의 경우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추진력을 가진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대체로 기술적 역량과 재원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절차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재정 관련 기관이 제도의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대상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여러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이며, 사전분석, 자문회의 등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향후 대상사업 선정의 공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 편성 심의위원회 또는 성인지예산제도 발전 위원회(가칭)’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의 실질적인 위치 및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¹⁹⁾

18) 이러한 현상은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수행사업,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가능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은 필수사업에 해당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협의사업에 해당된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 대상사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인접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센터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컨설팅은 작성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컨설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주, 2012).

19)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기는 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 선정 시 여성가족부는 처음으로 대상사업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산림청의 ‘숲 가꾸기’, 국제청의 ‘조세박물관 운영’을 포함한 9개 사업에 대하여 부적절 사업으로 판단,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2b).

□ 평가방법의 발전 및 결과 환류 필요

평가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평가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 및 기관 등의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측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환류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과정 필요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이 요구된다. 앞서 제시된 평가모형 및 평가기준은 기타 평가 관련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가자의 관점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그러나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평가기관의 평가목적 및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도 주체들 간의 협력체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관을 유형화하여 평가 실시

기관을 유형화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경우 대상 사업 수나 예산규모에 있어 기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온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평등 이슈와 연관이 크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결산서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가 평가모형에 포함될 경우, 그 차이는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관의 사업 수나 예산규모는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기관의 추진의지 및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를 제외시키기 보다는 기관을 사업 수 및 예산규모에 따라 유형화한 후, 유형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형별로 평가결과가 제시될 경우, 동일 유형의 기관끼리는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며 미흡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평가결과를 기관에 환류

평가결과를 기관에 환류하여야 한다. 작성에 참여한 기관들에게 기관별·사업별 평가결과와 종합 평가결과를 공지함으로써 내년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보는 기관 및 담당 공무원의 관리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나 여성가족부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작성지침이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환류과정에 약간의 강제력을 부여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경우 당해 연도 업무계획 작성지침에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경우 평가지표에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법령 등의 정책개선에 연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평가결과가 누적될 경우 전년도 평가결과 활용도 등을 평가지표로 포함하고, 이를 지침에 명시하여 사전 공지한다면 환류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홍보 필요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 김동식 외(2011)는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권 및 공무원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관료적 무관심이 나타났으며, 일부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경우 제도의 명칭과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²⁰⁾ 따라서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경우 제도에 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20)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평등’예산안 언제쯤 나오려나(2009. 11. 25. 한계레21), ② 박물관 운영비·예방접종비가 성평등 예산?(2012. 7. 24. 한계레신문), ③ 부실하고 형식적인 성인지결산서(2012. 8. 23. 통합진보당 원내소식지)

참고문헌

- 감사연구원(2006), 『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 보고서』.
- 강영철(2010), “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정부업무평가 제도 내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3).
-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1a),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1b),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2a),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2b),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기획재정부(2009), 『2010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기획재정부(2010), 『2011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기획재정부(2011), 『2012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기획재정부(2012a),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 기획재정부(2012b),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12. 6. 12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외(2012), 『재정사업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일반재정사업 성과지표 사례집』.
- 김경희 외(2011),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선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김규옥(2011),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성과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근세 외(2010),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 김동식 외(201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 외(2008),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 성인지 예산서(안)의 시범 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 외(2010),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 성인지예산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주(2012), 『충청남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발굴 및 제안』, 충청남도여성정책 개발원.
- 김진영(2010), “개발도상국 성인지 예산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준 외(2008), 『성평등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부.
- 대한민국정부(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대한민국정부(2010a),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0b), 『2011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1a),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1b), 『2012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2a),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 대한민국정부(2012b),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2c), 『2013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박노옥 외(2007),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노옥 외(2008),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지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노옥 외(2012),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옥(2007), 『캐나다의 성분석(GBA) 정책 운영사례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부(2008),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2008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안내서』.
- 여성가족부(2012),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윤성채 외(2012),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의 PART 활용: 2단계 재정사업자율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1).
- 이광희(2012), “성과관리와 평가체계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캐나다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1).
- 이윤식 외(2005),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 이재경 외(2009), 『국가와 젠더-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울아카데미.
- 이재경 외(2011), 『국가, 젠더, 예산: 성인지 예산 분석』, 한울아카데미.
- 임주영 외(2012),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 구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2010),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2011), 『성인지예산분석평가사업(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2012),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 주무현(2012), “고용영향평가 방법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고용영향평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확대방안』, 여성부.
- 한국조세연구원(2006),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 한국조세연구원(2008),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홍미영 외(2011),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의 도입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4).
- Davies, I. C.(1999),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Government”, Evaluation, Vol 5(2): 150-159.
- Hewit. G(2002), “Gender-Responsive Budgets: A Review of Commonwealth Experience, Provisional Agenda Item 6”, FMM(02)11, Commonwealth Secretariat.
- Perrin, B.(1999), “Effective Use and Misuse of Performance Management”,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Vol 20(1).
- Wholey, J.(1999), “Performance - Based Management-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Vol. 22(3): 288-307.
- World Bank(2011),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 :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부 록

〈부록 1〉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목록	105
〈부록 2〉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목록	115

<부록 1>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목록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회	입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인턴
기획재정부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지원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결혼이민자 소비자교육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	
	국제연구인력교류	
	글로벌교육협력지원사업	ASEM 장학협력
		한미교육위원단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4년제대학생인턴십지원
		WEST 프로그램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지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대학생국내외봉사활동지원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	
	의과학자육성지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	학문후속세대양성
	저소득층장학금지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사업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WATCH 21, WISE, WIE
	과학관 전시전문인력양성	
	여성과학기술인지센터 설치운영	
외교통상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국별 국내초청 연수사업
		라오스 아동병원 건립사업
	아프리카 지역 국가원조	국별 국내초청 연수사업
		나이지리아 국립소아병원 건립사업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국별 국내초청 연수사업
		과테말라 소녀의집 교육시설 강화사업
		과테말라 모자보건 향상 사업
	중동 CIS 지역 국가원조	국별 국내초청 연수사업
		파키스탄 카라치 의류생산기술 훈련원 건립사업
	다국가 국내초청 연수사업	
	외국교육자워크숍	
	초청 및 파견	차세대지도자 교류
통일부	청소년 교류	한미한중한일 청소년 교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법무부	성폭력범죄자치료·재활활동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법교육 연구개발 및 활동지원	
	직업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국방부	교육훈련장획득관리	유격장 여군편의시설 설치
	주요기관 기본경비	국방부 여성정책 발전 및 지위향상
	기타정책사업	각 군 어린이집운영 보조금 지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콘텐츠 개발비
		성인지력 향상교육
		국방여성정책 홍보물제작
		각 군 여성정책 활동지원
		여군의 참여와 역할증대 방안 연구
		여성 고충상담관 활동비 지급
	지자체 여성 등 균형인사 정책지원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연수원 수입대체 경비	자치단체 여성리더양성과정 운용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화마을 조성(경상)(정보화)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	정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자원봉사활성화 지원(경상)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방송영상 산업인력 양성	
	문화정책 개발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국악원전속단체 운영	전통예술인턴
	민속국악원 운영	전통예술인턴
	남도국악원 운영	전통예술인턴
	부산국악원 운영	전통예술인턴
	공연활동지원	문화예술인턴운영
	미술관운영지원	등록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아시아 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 현장인력 재교육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여성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이주민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디자인 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인적자원육성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교육운영	
	동축산물검역검사	정밀검사실험 및 탐지견사양관리 보조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시험연구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R&D)	연구보조인력 채용
	표준교육비(수입대체경비)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농기계임대사업	
	농산물안정성조사	분석보조원 일용임금
	농어업경영컨설팅(지자체)	
	농어업기반정비(제주)	창업후계농어업인육성, 농업인교육 훈련, 농어업경영컨설팅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정보화, 지자체)	
	농업경영체등록	등록조사원 채용 인건비
	농업벤처육성	
	농업인교육훈련	
	농업인교육훈련(지자체)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 강화
	도농교류활성화(지자체)	사무장 채용 지원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어촌리더개발 및 여성어업인 육성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지자체)	어업인교육훈련
	어촌어항관광개발(지자체)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지원
	창업후계농업인육성(보조)	
	창업후계농업인육성(융자)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및가사도우미)	
지식경제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
		디자인전문인력양성
	에너지인력양성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관리사
	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및 성과중심자활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사업	
	아동안전지킴이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여성장애인지원(교육)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시간연장형 교사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단체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노인일자리확충 지자체 보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약품제조관리(GMP) 인력양성 지원	
	임상의과학자 양성	
	감염병전문가 교육	
	노인일자리확충(제주)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산모건강관리	임산부아동건강관리
	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보조	
	국가예방접종실시지자체보조	
	국가예방접종실시	
	국민연금상담원 운영	인건비, 기타경비
환경부	환경지킴이	5대강 환경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 운영
		국립공원지킴이
	국제환경교육	
	녹색환경경제금융기반구축	환경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물산업지원기반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양성사업
	신화학물질관리제도대응 및 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전문인력양성
	환경무역대응대책추진	국제 환경규제정책 전문인력 양성사업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지원(R&D)	토양지하수 전문인력양성사업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양성
고용노동부	글로벌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직장직업체험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지원인건비	취업애로계층 직업진로개발지원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지원
	직업안정기관 운영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모성보호육아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고용유지지원금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지원	
	기술기능인력양성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지원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지원
	국가 기간·전략 직종훈련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	
	중소기업훈련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취업촉진수당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	
	양성평등문화 확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이버 멘토링 운영	
	여성단체 공동협력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가족문화 조성사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국제개발협력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성범죄 청소년 치료, 재활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국토해양부	첨단우주항공 인력양성	
	물류전문인력 양성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u-city 인력양성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저상버스 도입보조	
법제처	수요자중심법령정보서비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활성화	스포츠분야 인권개선
	취약분야 인권개선	여성차별시정 사업
공정거래위원회	다문화가족 소비자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민간소비자단체 참여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금융전문인력양성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조사활동	조사관교육지원
국세청	조세박물관 운영	
조달청	서울청사어린이집 운영	
통계청	통계전문교육지원	
경찰청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아동성폭력 조사시 전문가참여제
		소년법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문화재청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지원	
	문화재종합관리체제구축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확충	
농촌진흥청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보조)	
	농업전문 인력양성	농업인대학 운영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	
	농업인력개발 교육	
	농기계 훈련사업	
	농작업 재해예방	
	자원활용 기술보급	농촌 교육농장 육성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제주)	농기계 훈련사업
산림청	산림서비스 증진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기술 기능인력양성	산학여연계맞춤형인력양성
	소상공인 경쟁력제고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
	기술창업활성화지원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지원
	여성기업육성	
	대상별맞춤형창업지원	여성창업육성
	취업조건부 교육훈련	인력채용패키지사업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발명교육활성화	발명교실운영지원
	수요자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대학특허교육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인허가 심사지원	의약품 등 허가심사 전문인력 운영
해양경찰청	직장내 보육시설신축 및 운영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해양환경보전활동프로그램개발운영(결산서 상에 해양오염 예방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정지역 주민 직업전환교육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노후복지지원	

<부록 2>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목록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회	입법활동지원	의정활동지원인턴운용
대법원	국선번호료지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기획재정부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장애 학생교육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한국장학재단 출연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평가	
	의과학자 육성 지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R&D)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	ASEM-DUO 장학사업
		한미교육위원단 지원
	중견 연구자 지원(R&D)	
	국제 연구인력 교류	
	과학관전문인력양성(손익계정)	
외교통상부	몽골(ODA)	몽골울란바타르시 지역난방 및 용수 공급시스템 개선사업
	네팔(ODA)	네팔무구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사업
	파키스탄(ODA)	파키스탄 건조농업대학 농축산기술역량강화센터 설립사업
	가나(ODA)	가나다웨냐지역농촌종합개발사업
	중남미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아이티캡하이선직업훈련원건립사업
	팔레스타인(ODA)	팔레스타인제닌청소년센터건립사업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해외봉사단(ODA)	해외봉사단사업(WFK/World Friends Korea)
	다국가연수(ODA)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등 국제기구진출 지원	
	외국교육자워크숍	
	초청 및 파견	차세대지도자교류
	청소년교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취업장려금지급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사립대학지원금지급
	통일미래 맞춤형 교육 운영	통일미래지도자 및 전문강사 양성
법무부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교정교화	
	치료감호자수용관리	
	성폭력범죄자치료재활활동	
	보호관찰활동	
	특정범죄자위치관리	
	법무검찰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양성평 등교육	
	청소년비행예방	
	법질서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	법교육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국방부	주요기관 기본경비	국방부여성정책발전지원위향상
	전직지원교육	장기복무전역예정간부전직컨설팅
	일반대학위탁교육	생산적군복무여건보장및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장 획득관리	유격장여군편의시설설치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기타정책사업	여성고충상담관활동비지급
		성인지력향상교육
		성인지력향상대외위탁교육
		국방여성정책발전방안연구
		각군여성정책활동지원
		국방여성지발간사업
		각군어린이집운영보조금지원
행정안전부	연수원수입대체경비	자치단체 여성리더양성과정 운영
	청사시설관리등위탁	정부청사 어린이집 운영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경상)	
	지자체여성등균형인사정책지원	
	외국인주민의사회적응및자립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정보화마을조성및활성화(경상)(정보화)	
	지역공동체일자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전속단체연수단원운영
	국악원전속단체운영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민속국악원 운영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부산국악원 운영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정책개발	양성평등문화환경조성
	문화동반자사업(ODA)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공예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미술관 운영지원	등록미술관학예인력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회서비스)	
	체육바우처 지원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육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관광전문인력교육
		관광아카데미
		관광안내인력교육
		관광통역안내사교육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관광숙박종사원교육
	인적자원육성관리	
농림수산물부	동축산물검역검사	정밀검사실험및탐지검사양관리보조
	농수산식품연수원수입대체경비	
	농림수산물검역검사기술개발(R&D)	연구보조원인력채용
	수산물시험연구(R&D)	연구보조원인력채용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농수산식품연수원교육운영	HRD및농업인소비자교육
	농산물안전성조사	일용임금
	농기계임대	
	후계농어업인경영육성	
	농어업경영컨설팅(지자체)	
	자율관리어업육성	
	자율관리어업육성(지자체)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어촌관광활성화	
	어촌관광활성화(지자체)	여성사무장채용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어촌리더 개발 및 여성어업인육성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지자체)	어업인교육훈련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건강한식생활확산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지자체)	
	농어업경영체등록	등록조사원채용,연금지급금
	취약농어가인력지원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용자)	
	도농교류활성화	인적역량강화
	도농교류활성화(지자체)	농촌마을사무장채용지원
	농어업기반정비(제주)	농업인교육훈련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
	어업인교육훈련(제주)	어업인후계자교육
지식경제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디자인인력양성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에너지인력양성(에특)(R&D)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R&D,정보화)	대학IT연구센터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급여관리사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자활사업	자활근로
		성과중심자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의약품제조관리(GMP) 인력양성 지원	제약산업실무인재양성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전문가교육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파견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보조견전문기관지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시간연장형교사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공립확충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	
	노인단체 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일자리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노인일자리지원(제주)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국민연금상담요원운영 인건비	
환경부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
	녹색환경경제기반구축	지식기반환경서비스전문인력양성
		환경컨설팅전문인력양성교육
		에코디자인전문인력양성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	생태독성및생태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물산업기반구축	물산업프로젝트매니저양성
	환경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5대강지킴이
	환경무역대응대책추진	국제환경규제정책전문인력양성
	국제환경교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인력지원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직업안정기관운영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글로벌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지원사업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고용창출지원사업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중소기업훈련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기술·기능인력양성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양성	
	장애인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양성평등문화 확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여성단체 공동협력	
	여성·가족정책의식 확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이버멘토링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 직장교육
	아이돌봄 지원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관리 및 교육	
	성매매피해자지원	
	아동, 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보조)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시설확충(지역개발계정)	
	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국제개발협력(ODA)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국토해양부	U-City 인력양성	U-City 석박사과정지원
		U-City 인력양성센터지원
	국토공간정보 인력양성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저상버스도입보조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제대군인 직업교육 훈련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	스포츠분야 인권개선
		성차별 예방 사이버과정 운영
	취약분야 인권개선	여성인권 증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전문인력양성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조사활동	조사관교육훈련지원
국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모범납세자 선정,지원
관세청	여행자통관선진화	여행자통관지원용역
조달청	서울청사 어린이집 운영	
	조달전문교육 운영	
통계청	통계전문교육지원	
경찰청	생활안전활동	지역사회경찰활동(시민경찰학교운영)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아동성폭력전문가참여
		소년범조사전문가참여
	아동안전지킴이	
문화재청	전통문화연수원운영지원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궁능방재시스템구축	인건비
농촌진흥청	이공계대인턴쉽운영(R&D)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해외농업글로벌인재양성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보조)	
	선도농가경영육성(보조)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농업인대학운영
	농업인력개발교육	
	농작업재해예방(보조)	
	농기계훈련사업(보조)	
	자원활용기술보급(보조)	농촌교육농장육성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제주)	농기계훈련사업(제주)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서비스도우미(보조)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재해모니터링(보조)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여성기업육성	
	창업저변확대	중소벤처창업대학원운영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공동채용·훈련
	중소기업컨설팅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소상공인교육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대학(원) 지식재산강좌 운영
	발명교육 활성화	발명교실 운영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약물남용예방 교육사업
		교정시설수용자교육사업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보육시설유지운영	보육시설운영비

Abstract

A research on budgetary program selection and evaluation criteria for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gender budget balance sheets

Sun-Joo Cho
Hyo-Joo Kim
Hyo-Seon Kim

Gender Budgeting System has achieved great development in expanding its legal and systematical basis since the system was in effect by the National Finance Act in 2006. However, there have been doubts expres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and there has yet been an agreement on the institutional strategy for providing a selection criteria for budgetary programs and its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both the budgetary program selection and evaluation criteria. Both criteria were applied to gender budget documents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he research. The budgetary program selection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gender budget statement of fiscal year 2013, and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gender budget statement of fiscal year 2013 and the gender budget balance sheet of fiscal year 2011.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e selection criteria and process in three steps. First,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of the budgetary programs should be classified by program sectors and tools, and for those aspects that can be analyzed and reviewed prior to the budgetary program selection should be categorized by following the government's two-hundred and seventy-six program selection criteria (Step 1). Second, by taking the Mid-Long Term Fiscal Policy and the Annual Budget Compilation Framework into account (Step 2), each government department selects their budgetary programs that they will focus on throughout the fiscal year by considering their gender equality objectives (Step 3). For new budgetary programs, a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 in-depth analysis by experts are recommended to be conducted in advance. The proposed criteria in the research were applied to budgetary programs in the 『2013 Gender Budget Statement』. Only eighty-three criteria among the two-hundred and seventy-six criteria were included in the current budgetary program selection, and the gender budget programs appeared to be concentrated in specific program sectors and tools (Welfare·Employment·Health - Public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proposed and the results of their application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prepared gender budget documents, and on gender budget programs were demonstrated in the research.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agencies, the following agencies were rated as “Outstanding” or better for their gender budget statements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the gender budget balance shee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Statistics Korea,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ere rated as “Outstanding” or bett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n program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40% of the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70% of gender budget balance sheets were evaluated as “Outstanding”) was determined to be an exemplary agency for preparing gender budget documents.

However, prior to reviewing and developing the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the criteria, an agency for selecting gender budget program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development in evaluation methodologies and the feedback system is necessary.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11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2012년 12월 26일 인쇄

2012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544-2 93330

<정가 9,000원>